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3. 9.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2.9

대한민국정부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 (697건)

□ 기획조정실 (31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 국토교통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사업 기술이전·거래 활성화 등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공급자(대학, 출연연) - 전문기관(KAIA) - 기술수요자(기업) 등 협의체간 업무 협약 추진 계획 수립('23.3월) * 협의체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의 니즈 기술 발굴·공유 및 기술보유자 탐색·매칭 등 기술이전 및 거래활성화 제고
기획조정실	2.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시하여 지적사항의 약 80%(26건 중 20건) 이행 완료('23.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합의 등을 거쳐 나머지 권고사항도 조속히 이행토록 지속 독려
기획조정실	3.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신규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 기능을 조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인력효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확정('22.12월) - 인력 효율화는 '일정기간 지속된 정원과 현원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 현원이 아닌 계획상의 초과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재 종사자의 인위적 감축은 없음 *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병행해 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노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4. 공공기관 제출 혁신안이 실질적인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재부, '22.7월)에 따라 기관별 혁신방안 기마련('22.12월) * 기능조정,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자산정비 등 ○ '23년 1분기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23.4월) * 향후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예정
기획조정실	5. 편법으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엄격하게 감사하고, 정상화하며, 부실한 자회사·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하여,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의 정비계획을 확정('22.12월) - 총 10개 공공기관에서 55개 출자회사를 정비(매각)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분기별로 혁신과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 추진
기획조정실	6. 공공기관의 균형적인 신규 채용을 도모하고,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전성 제고, 일부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기 실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적인 신규채용, 추가적인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지속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7.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 단체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신설·보완 권고를 이행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 대해 이행하도록 지시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시하여 지적사항의 50%(8건 중 4건) 이행 완료('23.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합의 등을 거쳐 나머지 권고사항도 조속히 이행토록 지속 독려
기획조정실	8.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성범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비위 징계규정 마련, 비위에 따른 징계 규정 세분화 등 관련 규정 개선 시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 등 지속 추진
기획조정실	9.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의 재무건전성 하락에 따라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기 마련('22.12월) - 이에 따라, 기능폐지·이관 등 기능조정과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 ○ 또한, LH와 코레일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22.6월, 기재부)하여 집중관리* *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분기별로 혁신과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0. 도로공사나 LH 등에 대한 경영평가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갖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기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 중 - '23년 공공기관 지정 시, 2개 기관(KAIA,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23.1월)되어, - 국토부에서 평가하는 대상이 13개에서 15개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체 변경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필요
기획조정실	11.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와 경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22.12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기재부)) ○ '2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편람 마련 등('22.10 기재부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행 점검 및 경영실적 평가(매년) 등을 통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등 경영실적 개선을 유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2.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작년의 경우 약 50% 정도 미조치가 이루어진바,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조치 현황 등 상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율 제고 추진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점검회의 개최(2차례) <p>* (“23.6월) 실무점검 및 검토, (“23.8월) 점검회의</p>
기획조정실	13. 공공기관장 재신임 제도 내지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맞추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정책추진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중으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예상 <p>* (주요 개정내용) 공공기관의 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함</p>
기획조정실	14. 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타 부처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시정·개선 등 조치 이행을 기요청(‘23.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채용현황 지속 모니터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5.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인력효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 확정(‘22.12월) - 인력 효율화는 ‘일정기간 지속된 정원과 현원차 최소화’가 목적이며, 현원이 아닌 계획상의 초과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현재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위적인 감축은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분기별로 혁신과제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 추진
기획조정실	16.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전문직으로 바꾸어 나갈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신임 기관장 임명(’22.11월) ○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인천공항공사·HUG 등 기관장 임명절차 진행 중 * 향후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리더십·전문성을 갖춘 책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
기획조정실	17.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을 막겠다고 한 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공항공사 전략본부장 상임이사 등이 국토교통부 출신인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솔선수범을 보일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 등에 따라 진행하며, * 임원추천위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18. 병무청에서 요청하는 부동산 거래, 하이패스·기차 이용내역 등 자료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응하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시정·개선 등 조치 이행을 기요청('23.2월)
기획조정실	1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및 음주운전 등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중으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 예상
기획조정실	20.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국토교통 R&D 예산이 비수도권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에 대한 R&D 예산 투입 지원 사업 기획을 위한 국토교통 기획연구 과제 선정('23.2월) 및 기획연구 추진('23.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연구 추진 결과에 따라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R&D 사업에 대한 '25년 신규 예산 반영 추진('24.5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21. 소관법령 중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제정을 실시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하여 미실시 이유 및 조치사항 점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법령 제정 지연법률 현황 조사 (총 3건)*, 및 조치계획 점검('23.3월) <p>* 2건(도시교통정비법, 택시발전법) 정비완료, 미완료 1건(항공사업법)은 조속한 하위법령 마련 요청</p>
기획조정실	22.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 기여도에 초점을 맞춰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SOC 예산을 편성 중이며, 모든 SOC사업은 지역간 연계강화 및 지역거점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 ○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국회 논의 중 <p>*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2.12) 등 16건</p>
기획조정실	23.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공공기관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 등 문제에 대한 방지책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혁신과제에 '기관 내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 과반수 외부위원으로 위촉' 등을 포함하는 등 관리강화 방안 기마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직원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24. 지방국토관리청, 업무 확대에 따른 국토교통 관리청 등 개칭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 수시직제요구서 제출('2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책임 하에 국정과제인 교통안전 강화, 미래모빌리티 육성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령상 국토관리청의 기능을 신설하고, 명칭도 국토교통청으로 개편 ○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통보('2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기획조정실	25.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각 지역 중점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면제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15개 세부사업 (24개 내역사업) 정상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10개 사업은 설계단계이며,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5개 사업은 발주 및 공사 단계 <p>* 예타면제→사업계획적정성 검토→타당성평가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 착수→사후평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26.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래에 따른 네트워크 장애, 정보보안 침해 등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사이버안전센터*에서 24시간 정보보안 침해(해킹 등)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조치(연중)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대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조치하여 사이버공격에 선제적 대응 * 국토교통사이버안전센터: 주/야 2교대(24시간 근무), 관제대상: 39개 기관(본부, 소속, 산하) ○ 정보화사업 계획단계(사업공고 전)부터 보안성 검토를 강화하여 네트워크 장애 요인과 정보보안 침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 조치(연중) * 22년 보안성검토(649건)
기획조정실	27.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인턴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별도전형과 특별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시정·개선 등 조치 이행을 기요청('23.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채용현황 지속 모니터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28.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를 적극적 활용 하도록 조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하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시정·개선 등 조치 이행을 기요청('23.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채용현황 지속 모니터링
기획조정실	29.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 65개중 27개를 폐지 하고, 5개는 통합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주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22.7)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3건) 국회 제출('22.9),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23.2) - 교통분야 위원회 일괄정비 법안 소위 심사('23.4) 및 상임위 의결('23.5) * 시행령 개정사항인 1건(항공보안협의회) 정비 완료('23.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정기국회 기간 내 위원회 일괄 정비 법안 통과를 위하여 적극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30. 감사원이 철도공사와 SR에 7천여명의 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철도이용내역을 자료 요구한 것은 법 위반 이자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므로 동 사안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추궁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민감한 정보를 감사원 등에 제출 시, 위법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 업무지침 마련 <p>* 코레일 '23.6월, SR '22.11월 마련</p>
기획조정실	31.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상임 본부장에 국토부 출신을 임명하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 등에 따라 진행하며, <p>* 임원추천위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국토도시실 (76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 공공·민간 부문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부문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공공은 2.4천여 동 국비 6.8천억 원 지원 (~'22), 민간은 총 7.3만건 승인, 332억원 지원('14~) * '18년 52.1백만에서 '30년 35백만, 32.8% 감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은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다물량 용도시설로 확대 - 당초 3개 시설(어린이집, 보건소, 병원)이었으나, '23년부터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도 포함 * 건축물대장에 그린리모델링 이력을 기재함으로써 간접적 자산 가치 증대 기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2.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를 심사일 기준 52일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공정성·투명성 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개정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20억원 이상의 설계공모에 대하여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심사일 기준 5~7일 전), 심사과정의 실시간 공개, 심사총량제 등 도입 * 관계기관 협의('22.10)→지침 개정 내부 방침('23.2)→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23.2~'23.3)→고시 및 시행('23.4.1) ○ 관련 TF 구성 및 지속 협의를 통해 설계공모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지속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TF 1차 회의('23.4.7)
국토도시실	<p>3. 방 쪼개기·세대 쪼개기 주택을 선의로 매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률을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을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축물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의 감경률을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22.11.2, 민홍철 의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4.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있는 건축사의 명칭, 인정 범위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 진행('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결과) 법적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설계공모 또는 건축대회의 '수상(受賞) 건축사(가칭)' 등으로 변경하고, 인정범위 요건 등을 변경할 필요 - 또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건축설계공모 입상자 명단 취합 등 명단 관리방안 마련 * 설계공모포탈(세움터) 및 건축사 실적 정보 (건축사협회)를 통해 체계적인 명단 관리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검토·마련('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있는 건축사 현황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있는 건축사'에 정의 및 인정범위 변경 등 * 역량있는 건축사의 감리 현황 등 조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5. 역량 있는 건축사 제도로 인해 소수의 건축사가 독점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개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22.10월, 국토부·지자체, 협회)로 제도 운영상 문제점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논의키로 함 - (의견 수렴) 지자체(설명회 '23.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를 통해 역량있는 건축사의 감리 관련 지자체 운영현황 파악('23.8.) ○ 유관단체·전문가 등 의견 수렴 통해 개선안 마련('23.12.)
국토도시실	6.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 자재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자재 품질인정제도 안착을 위해 시험 기관 협의체 논의('23.1)를 통해 명확한 시험 절차 및 기준 마련, Q&A 배포('23.3) ○ 품질인정자재의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이력관리를 위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발주('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자재를 포함한 품질인정자재 통합 관리 플랫폼 시범운영('2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7.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서면 고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특정건축물정리법」을 통해 위반 건축물 양성화* 시 언론 홍보 등 추진 * 1차('80.7), 2차('81.12), 3차('00.3), 4차('06.2), 5차('14.1) 시행으로 총 49만 동 양성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서면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추진
국토도시실	8.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해소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지자체 주도 정비 지구에 대하여는 한국 부동산원으로 업무이관에도 불구하고, 방치 건물 관련 예산이 미흡하므로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관련, '23년 예산 확보(9.4억원)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계획 수립 지원 등 정비업무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나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고, 선도사업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24년도 예산에 관련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9.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단체장이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 * 부울경 3개 단체장 공동 입장문 발표(22.10.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
국토도시실	10.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의견 충돌을 중개·조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단체장은 관련 논의를 거쳐,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는데 합의* * 부울경 3개 단체장 공동 입장문 발표(22.10.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1.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국가사무의 일부 위임에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3년도 정부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 「국가균형발전법」 제10조의2제2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99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울경의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2. JDC의 제주형 DMO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O 사업 운영기관 선정의 적절성 검증 및 조치 요청('22.11, 국토부→JDC) ○ DMO 사업 과정에 대해 JDC 자체 감사 실시('22.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평가위원 선정 과정과 내부평가위원(2명)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은 없었으나, 내부평가위원 직급 상향 등 개선 필요 ○ DMO 사업 절차 등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JDC, '22.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지평] 국가계약법 및 타 기관 관련 규정과 비교 검토한 결과, 법률적 위반사항은 없으나, 내부기준 등 정비 필요 권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내부기준 개선* 등 적기 조치여부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사업(기부금사업) 관련 JDC 내부규정 제정 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3.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 권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경기 동북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시도*(정비발전지구 신설 등)가 다수 있었으나, 모두 지역 갈등으로 인해 계류 중 폐기 * 18대~20대 국회 간 총 9건 모두 폐기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환경부, 한강하류) 상수원 오염 등 한강수계에 직접적인 악영향 우려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기업 지방이전 감소 및 지방대 수도권 유입 등 비수도권 지역경제 침체 우려, 지역 간 갈등 초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4.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선도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단」 출범('22.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발전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 및 지원 추진
국토도시실	15.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태양광·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이격거리의 합리적 상한선을 두거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속히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발표('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격거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등 * (참고) 태양광·풍력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진행 중('22.11.신영대의원등10인 제안, '23.2. 소관 위원회 상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입법 진행상황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치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6. 대한민국과 울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울산 도심융합 특구를 조속히 결정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완료('22.12)
국토도시실	17. 용산 미군부지 전부 반환 이전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개방부지에 대해 토지피복, 잠재 오염원 제거 등 위해성 저감조치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기질 모니터링 시행('23.2~'23.12)
국토도시실	18.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함에 따라, 기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 선정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향후 철저한 시뮬레이션 또는 현장 확인 이후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률 공포일('21.12) 이전에 민간 사업자를 정한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 ('22.6) 전에 구역지정을 완료하지 못하였 더라도 개정법률의 적용을 3년 유예 하는 부칙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22.9),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 ('23.3.) <p>* 미리 정한 민간사업자가 있는 경우, 당초 개정 법률 중 민간이윤율 상한, 초과이익 재투자 등은 적용하되,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만 적용을 3년 유예</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19.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GB 해제권한 위임범위 확대, 비수도권 도시간 연담화 방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2.28~4.9),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 해제권한 확대, 연담화 방지 완화 관련 GB법 시행령 등 개정
국토도시실	20. 개발제한구역 총량 규제에 대해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지자체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지자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가 전략사업을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경우 GB 총량에서 제외토록 「광역도시 계획수립지침」 개정('23.4)
국토도시실	21. 원주 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이 없는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안에 대해 지자체에 공정한 공원 조성이 되도록 권고하겠음 - 또한 민간특례사업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침 개정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겠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민간 특례사업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2. 국토교통부가 관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진행* * '22.10월~'23.2월 감사 후 결과통보 대기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및 수정하여 추진하겠음
국토도시실	23.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올레가 JDC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기부금 사업 검증 및 조치 요청 ('22.11, 국토부→JDC) ○ 제주올레 사업에 대한 JDC 회계 검증 실시(JDC, '22.12~'23.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의 기부금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가이드 마련 추진 지도·감독
국토도시실	24.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의 차질없는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24년 중 정비기본방침 수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5.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 심사를 조속히 준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가 마련 중인 특별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법안 심사를 추진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상반기 법안 국회를 통해 법안 심사 추진
국토도시실	26.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신속추진만 강조되고 있어 시민 체감과 큰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성·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지자체장 간담회·총괄기획가 활동·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지역간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을 1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발표('23.2.7)
국토도시실	27.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일시에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기본방침에 관련 사항을 검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24년 중 정비기본방침 수립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28.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중복 업무, 실질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 설정과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관기관장 간담회 개최('23.3.15) *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 공간정보 유관기관 거버넌스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중 ('23.5~'23.1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 유관기관 거버넌스체계 개선 방안 마련('23.12)
국토도시실	29.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중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에 다양한 측량 신기술이 접목되도록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MMS, 드론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S, 드론 등을 활용한 2023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조속 추진 -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후 연말까지 수치지형도 성과 제작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3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전 국토에 대해 1/1000 축척 지도로 제작하려 하는데, 도심지역을 제외한 비도심지역에 대해서는 1/1000 지도를 제작할 이유가 없으므로 철회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에 한하여 1/1000 지도 구축계획 마련 및 '23~'27 중기사업계획 제출
국토도시실	<p>31.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트윈 국토 추진 근거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이종배의원, '22.8.24)하여 현재 국토법안소위 상정대기 중 ○ 디지털트윈 국토 실현을 위한 '23년 예산 1,409*억 확보 <p>* 국가기본도제작 등 1,176억원, 지하시설물전산화 136억원,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45억원 등</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토법안소위, 법사위 등 대응 ○ 디지털트윈 국토 조기 실현을 위한 '24년 예산 증액 확보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32.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이 대폭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질없는 공원조성을 위해 관련 용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인호 의원실에 방문하여 향후계획 보고('23.2.2) - 관련 용역 진행 시, 기존에 수립한 용산공원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국토도시실	33.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 중 사업속도나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행률 제고를 위해 전수점검 및 미흡사업 점검회의(매월), 시·도 국장급 간담회(반기), 현장점검(수시) 추진 중('20.5월~) ○사업 성과를 반영한 성과연동형 예산체계를 도입하여 전년 실적 부진사업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22.9월~) ○ 실적행률 미흡 광역지자체에 대한 신규사업 신청규모 축소 및 우수 광역 신청규모 확대, 미흡 기초지자체 신규사업 신청 제한 등 인센티브·페널티 부여('23.3월) ○향후에도 매월 사업관리 및 지자체 독려를 통해 집행률 제고 지속 추진
국토도시실	34. 준불연 단열재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불연 단열재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기관 협의체 논의('23.1)를 통해 명확한 시험 절차 및 기준 마련, Q&A 배포('23.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35.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선정기준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 개념 도입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도시재생법령에서도 법 제13조4항에 따라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검토한 결과,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보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 더 범위가 넓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법령을 유지하여도 도시재생사업에 ‘인구감소지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p>* 각 법령상 인구감소지역 비율 : 도시재생법(82.4%), 국가균형발전법(2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지역별 인구감소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36. 도심복합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국회 논의 준비 중 ○ 공공 도심복합사업 9차례에 걸쳐 후보지 79곳 11.2만호를 발굴하고, 이 중 9곳 1.45만호 지구지정을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도입예정*으로, 과도한 민간특혜 및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일부는 뉴:홈 등 공공주택, 생활SOC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윤율 상한도 규정할 예정 <p>*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2.8.19, 김정재의원 발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3.2.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시에도 지방 노후 주거지 등 열악한 지역은 공공이 주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37.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법 제20조 등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명시한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2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검증을 통해 행정절차가 미흡할 경우 부적격 판단으로 해당사업 제외 ○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수요를 충실히 반영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38.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에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시 평가항목에 환기 성능확보 관련 내용 검토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심사기준에 환기설비 관련 항목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환기설비 설치 활성화 추진 *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의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 추진('23.下~)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 내 환기설비 관련 항목 개정 검토
국토도시실	39. 창원·울산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GB 해제권한 위임범위 확대, 비수도권 도시간 연담화 방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2.28~4.9),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 해제권한 확대, 연담화 방지 완화 관련 GB법 시행령 등 개정
국토도시실	40. 원전·방위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이 필요하므로 원전·방위산업 특화 국가산단 신규 지정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완료('23.3.15.)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 * 후보지 선정 관련 연구용역 시행(국토연, '22.7월~'23.5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41.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경기 동북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시도*(정비발전지구 신설 등)가 다수 있었으나, 모두 지역 갈등으로 인해 계류 중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대~20대 국회 간 총 9건 모두 폐기 ○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 수질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보호를 포함한 자연환경 보전과 더불어 국토 균형발전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지정 -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이 한강 수계의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 전체가 한강수계에 해당 ○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도권 내 지역 경제 활성화, 권역 지정의 취지, 비수도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 경기동부 경제 활성화 (반대)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환경 훼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42.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 용지조성사업 면적 제한 완화에 대해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경기 동북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시도*(정비발전지구 신설 등)가 다수 있었으나, 모두 지역 갈등으로 인해 계류 중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대~20대 국회 간 총 9건 모두 폐기 ○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규모(6만m²)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음 ○ 공업용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 의견에 공감하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의 집중 및 한강수계 수질과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은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43. 자연보전권역 내 6만 ~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가 아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경기 동북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시도*(정비발전지구 신설 등)가 다수 있었으나, 모두 지역 갈등으로 인해 계류 중 폐기 * 18대~20대 국회 간 총 9건 모두 폐기 ○ 현재 국토부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안건 작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제반 절차 이행으로 오히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단점과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44.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부 기관인 허가권자가 해체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규정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법의 제정 및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검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는 감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령은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특수건축물 등*에 한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해체 안전성 제고**에 기여 *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안전감리 및 책임해체 담보, 해체감리 전문 사무소 육성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협의) 이해당사자인 건축사협회와 간담회('22.11.25.)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 논의 ☞ 현행제도 유지 * (時/所) '22.11.25/ 건축사협회, (참석자) 건축정책관, 건축사협회 회장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45. 사업관리하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검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는 감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령은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특수건축물 등*에 한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해체 안전성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안전감리 및 책임해체 담보, 해체감리 전문 사무소 육성 등 가능 - (이해관계자 협의) 이해당사자인 건축사협회와 간담회('22.11.25.)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 논의 ☞ 현행제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時/所) '22.11.25/ 건축사협회, (참석자) 건축정책관, 건축사협회 회장 등
국토도시실	46.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내진능력 표시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1,412건 검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LH 수행)을 통해 착공대상 현장의 구조도서를 검토 - 조사대상 1,412건 중 PHC 말뚝(무근 콘크리트 말뚝)이 적용된 75건에 대하여 내진설계 준수여부 및 제출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기준대로 내진설계가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47. LX의 확정측량 업무 등 기능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지적측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적 확정측량을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23.3.) - 다만, 수익성이 낮거나 민간참여가 없는 경우 등 측량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LX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개정안 발의('23.6.)
국토도시실	48. LX가 지하공간통합 지도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게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설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정보 전담기구(LX)의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22년 8.9억원→'23년17.8억원) 하여 LX가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지하정보(지하공간통합지도 원천데이터)의 품질점검 및 개선 교육,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국토도시실	49. 지하공간통합지도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예외조항 마련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제한 공간정보(지하공간통합지도 포함)의 제공대상 확대 등 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안당국 협의('22.12.) * 현행(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 개선(기존 + 소프트웨어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지하시설물관리자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 발의('23.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50.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일방적으로 선정할 경우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비사업 진행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비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선도지구 지정 및 사업의 추진은 각 지자체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발표('23.2.7)
국토도시실	51.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통해 국토정보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정 관련, 관계기관회의 4차례 추진 ('21.4.27, '21.6.29, '21.8.4, '21.8.25) ○ LX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TF 3차례 운영 및 혁신방안 발표('22.12.26) ○ 국회 국토위, 법사위 등 법안심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법안소위 논의('23.3.1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국토위, 법사위 등 법안심사 대응
국토도시실	52. 익산 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활용수집업체의 이전에 따라 대체부지의 마련, 재활용수집인의 생계대책 등 대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인공원 내 불법점용*을 하고 있던 재활용수집업체는 부지를 명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없이 점용 - 공원부지 내 재활용품 수집을 하셨던 약 60명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해 노인복지 제도 컨설팅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형 일자리 참여 희망 여부 및 생계형 보조금 수령여부 등을 안내하여 생계대책을 마련했음을 확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53.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대책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거주민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지자체 소관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기준 완화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추진 * 협조공문('21.9), 워크숍('22.9), 간담회('22.12) 등 - 다만, 생숙은 주로 장기투숙객 대상 서비스를 위해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건축기준을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생숙 단지 인근 역민원, 부동산 규제회피에 대한 국민 정서, 他 불법 건축물 양성화 요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
국토도시실	54.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이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총 9곳* 추진 중 * 천안·고양 착공, 용산·구미·부천 지구지정, 광주·강서·안산·고창 지구지정 준비 중 - (광주역) 부지확보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혁신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고 후속 절차 진행 중 * 지구 지정('20.12월) 이후 달빛고속철 계획발표('21.7월)로 철도공단 및 코레일에서 매각의사 번복 ** 이사회결(코레일부지, '22.11월), 기재부 매각동의(철도공단부지, '23.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정한 국가시범지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진행 - (광주역) 상반기 중 부지 매입 완료, 하반기 지구 지정 완료 후 '24년 공사 착공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55. 하남산단 내 가설건축물 철거 위기에 놓인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해석으로 가설건축물이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맞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함을 해당 광역 지자체에 안내('22.12.27) ○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설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 중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행정예고 ('23.5.9.~'23.5.3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국토도시실	56. 정확한 국토정보 구축으로 행정효율을 높이는 국토이용현황조사 제도를 제도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현황조사 제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검토회의* 개최 *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한국국토정보공사('23.2.2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한 후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 * '스마트IN 양평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중 (총 3단계 중 2단계 수행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57.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대도시 위주로 해제 되고 대도시 주변 중소 도시는 존치되어 소외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GB 해제권한 위임범위 확대, 비수도권 도시간 연담화 방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2.28~4.9),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 해제권한 확대, 연담화 방지 완화 관련 GB법 시행령 등 개정
국토도시실	58. 불법건축물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 旣 발의 *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및 조사 거부시 과태료 신설('21.5, 장경태 의원), 이행강제금 상향('21.12, 강득구 의원)
국토도시실	59. 도시재생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 교육프로그램에 금융콘텐츠, 도시재생 자원조달, 비즈니스 매너 등 도시재생 실무연관 분야를 확대하고 도시재생 취·창업설명회 개최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업과 교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23.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강화, 근무여건개선, 취·창업 지원 등을 충실히 추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2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60.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정법 통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제정법 통과 이후에도 관계부처와의 협업, 지자체 지원 등을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국토도시실	61.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 성능검증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공간 대체시설 성능검증 기준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설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R&D 기획연구* 추진('23.5~'24.2) * 「성능 기반 복합자재 표준화 및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검증 기술과 건축자재의 블록체인 플랫폼 유지 관리 기술 개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이후 R&D 결과를 바탕으로 대피 공간 대체시설의 종합적인 성능(시공, 작동, 피난·구조 안전)을 실증할 수 있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2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p>62. 창호의 화재 안전기준 입법에 따른 업계 간 이견 등에 대해 협의 하고, 향후 쟁점 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 화재안전기준 관련 간담회(차관 주재, '22.7) 개최 ○ 창호 화재안전기준 관련 면담(장철민 의원실, '23.7)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안전을 위한 창호 재질 성능기준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 등 간의 갈등·이견이 큼 ○ 재질 성능기준에 따라 창호시장이 양분될 수 있어 당분간 쟁점 해소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중장기 검토 추진
국토도시실	<p>63.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설계자가 아닌 건축주와 직접 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독립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관계법령 및 실무현황 검토 (~'23.7월) ○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3.8.1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명확화를 위해 구조도면 작성 및 검증 주체 개선 방안 마련(~'23.10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64. 화재 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수 정정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대상을 확정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이해도 제고에 노력* 중이며, '22. 하반기 보강대상 재실태 조사를 통해 연말기준 보강대상** 재확정 ('23.1.10. 차관 보고) * 지자체 설명회('22년 13회), 사업관리 가이드북 배포('22.9월), 업무지침 보완·배포('22.8월) ** ('19.시범) 1,431동 → ('21.4월) 4,364동 → ('22.6월) 2,871동 → ('22.10월) 2,464동 → ('22.12.31) 2,241동
국토도시실	65. 화재 안전성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한 연기 외에도 세부 대책을 수립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강기한 및 지원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 법안 발의 ('22.9.16. 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 - 법률 개정·시행('23.4.18.) * 보강 및 지원기한 : '25.12.31.까지 ○ '23년도 자체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미보강 물량(859동**)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조치 예정 * '23년 화재 안전성능보강 추진계획('23.2.20.) ** 859동('22.12) : ('23년) 608동, ('24년) 126동, ('25년) 125동 ○ 미보강 물량(859동) 조기 보강 완료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23.4) 및 찾아가는 지자체 설명회* 추진 * 강원도(6.7), 대전·충남(6.8), 전남(6.16), 경기(6.20), 서울(6.21), 인천(6.22), 충북·세종(6.26), 울산(6.28), 경남(6.29), 전북·광주(7.3), 경북(7.5), 대구(7.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66. 충주호 권역 관광사업을 육성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중 충주호 권역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심항산 발길순환루트 조성사업의 '23년 설계비 예산(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 * 총사업비 196억원 (국비98억원, '23~'26년) - 향후에도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
국토도시실	67.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 설계비를 신규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심항산 발길순환루트 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설계비 신규반영 완료
국토도시실	68. 빗물 발생지점 저류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23.2.) *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강화, 방재지구 개편,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 차도용 블록포장에 투수성 포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2.12발주)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용 블록포장 관련 기준 개선은 국내외 기준, 시공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24.12. 완료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69.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관련 전수조사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건축물 관리 현황 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3.3~12) ※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실태 조사 실시(5년 단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건축물 추정 리스트 및 빈 건축물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24.6) - 다만,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정비 방안은 지자체장이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추진될 필요
국토도시실	70. 건축물 내부마감재 기준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 건축물 대상 확대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개정 방침 완료('23.7.28.) 후 입법예고 예정('23.8.22~10.1.) * 내부 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30개 이상의 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30개 미만의 병상)으로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71.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 기본계획에 활성화 방안 반영('23.3월) -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기본 계획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추진* (~'24) <p>* '22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연구 진행, '23년 연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용역 발주 준비 중</p>
국토도시실	7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유형을 확대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에 지원대상 유형 확대반영 - 기존 지원대상(어린이집, 보건소, 의료 시설)에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인 경로당, 도서관, 파출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73.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현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검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는 감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령은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특수건축물 등*에 한해 허가권자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해체 안전성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안전감리 및 책임해체 담보, 해체감리 전문 사무소 육성 등 가능 - (이해관계자 협의) 이해당사자인 건축사협회와 간담회('22.11.25.)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 논의 ☞ 현행제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時/所) '22.11.25/ 건축사협회, (참석자) 건축정책관, 건축사협회 회장 등
국토도시실	74.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시설 의무 설치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가 건물의 조건, 설비의 가격 등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별도 의무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토도시실	75.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선도사업(양주옥정-전남구례)을 착공('22.5~)하였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선례를 도출하는 한편, -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음
국토도시실	76. 광주 미래자동차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완료 ('23.3.15.)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 * 후보지 선정 관련 연구용역 시행 (국토연, '22.7월~'23.5월)

□ 주택토지실 (154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병산리 토지를 형질변경·등록전환·토지분할·지목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지가가 상승한 바, 해당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산리 산127-1, 산127-2, 산128번지 ‘임야’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되어 현재도 ‘임야’로 관리되고 있음 - 이러한 등록전환은 산지전용허가 없이도 현행 법령*상 가능함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임야도→지적도)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가능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등록전환 추진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대장(임야도)은 축척 1/6000로 등록함에 따라 정확도가 낮아 지적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축척(1/1200)으로 변환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측량의 정확도 향상,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대축척인 토지대장(지적도)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산리 산135번지에서 등록전환된 같은 리 1000-9번지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창고신축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준공 목적 및 토지이동현황에 맞게 정리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 청년원가주택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설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의 특징을 구체화하여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22.10.26) *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가, 매각 시 시세차익 70% 보장(25만호)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10만호) (일반형)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15만호) - 신설된 유형(나눔형, 선택형)의 세부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 제도기반 마련(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 '22.12.29)
주택토지실	3.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정책효과 등 검토·마련 * 최소 주거면적 하한은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사업에 최소한의 지원 기준으로, 기준 변경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 큼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4. 주택청약저축의 이율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0%p 인상 고시('22.11.23) - 기금 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자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조정
주택토지실	5. 주택경기 경착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제약 및 경제 충격 우려에 대응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등을 마련 -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23.1.5) - 전매제한 합리화('23.4.7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실거주 의무 폐지('23.2.2 주택법 개정안 발의), 중도금 대출('23.3.20, HUG 내규 개정·시행) 및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기준 폐지('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청약 제도 합리화('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개선 -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기관(HUG)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23.1.2) ○ 아울러,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공공임대주택 질적개선, 주거안전망 확충 등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도 마련('23.1.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6. 아파트 매매가 하락 및 전세가율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강릉 전세 주택이 증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마련·발표('23.2.2) -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전세가율 하향 등) 및 안심 전세앱 출시 등 전세사기 예방, 저리대출 및 긴급주거 확대 등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주택토지실	<p>7. 민간주도 도심개발 사업은 과도한 민간특혜 및 개발이익 사유화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성이 강화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차례에 걸쳐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57곳(8.5만호)에서 사업 추진 중으로, 이 중 10곳 1.68만호 지구 지정을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도입 예정*으로, 과도한 민간특혜 및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일부는 뉴:홈 등 공공주택, 생활SOC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 <p>*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2.8.19, 김정재의원 발의) 법안소위 심사중 ('23.4.26~)</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8.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집값 상승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등을 마련 -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23.1.5) - 전매제한 합리화('23.4.7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실거주 의무 폐지('23.2.2 주택법 개정안 발의), 중도금 대출('23.3.20, HUG 내규 개정·시행) 및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기준 폐지('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청약 제도 합리화('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개선 -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기관(HUG)의 보증 공급 신설 및 확대('23.1.2)
주택토지실	9.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 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해제 과정에서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 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을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 규제지역 해제 시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는 등 의견 수렴 * ('22.6.30) 지방 주요도시 규제지역 해제 * ('22.9.26)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경기 5곳 및 지방권(세종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 ('22.11.14) 서울 및 경기4곳 제외 규제지역 해제 * ('23.1.3) 서울4곳 제외 규제지역 전부 해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0. 도시정비산업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법 위반행위가 심각하므로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시(8.16) 공사계약서 인가권자 제출, 조합총회 전 사업비 검증완료 등 투명성 강화방안 포함 ○ 총회전 사업비 검증완료, 시공사 자료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민홍철, '23.1) ○ 재건축·재개발 종합 운영실태 합동 점검 추진('22.11.14.~12.9.)
주택토지실	11. 부동산 공급계획을 로드맵을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제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시(8.16) 향후 5년간('23~'27) 270만호 공급을 위한 지역별·유형별 세부계획 既제시 ○ 5년간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세부 공급계획 순차 발표(10.26) <p>*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및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지역 해제 등 시장 정상화 방안도 추가발표(1.3)</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2.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정비규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및 도심공급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22.9.29) 및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22.11.1) -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23.1.5) - 전매제한 합리화('23.4.7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실거주 의무 폐지('23.2.2 주택법 개정안 발의), 중도금 대출('23.3.20, HUG 내규 개정·시행) 및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기준 폐지('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청약 제도 합리화('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 개선 - 건설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기관(HUG)의 보증공급 신설 및 확대('2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종 규제지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청약시장 과열 안정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일원화하는 방안, 그리고 파편화·중복화되어 있는 규제지역 제도를 일원화하고 제도의 명칭과 지정 효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제도의 국민 수용도를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시장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지정요건, 지정주체, 규제효과 등 주요 규제사항 점검 및 개선 방안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주택토지실	<p>14.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G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사전심사 개정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기본요건 완화(미분양세대수 등), 최소 지정기간 단축, 심사절차 간소화 등 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5.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기준 상향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정책효과 등 검토·마련 * 최소 주거면적 하한은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사업에 최소한의 지원 기준으로, 기준 변경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 큼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추진
주택토지실	16.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 통계가 생산 되지 않고 있는 바, 동 단위 통계 생산을 실행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등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지역에 대한 면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특정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주택가격동향 상세조사를 실시중 - 다만 현재 생산·공표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주택가격통계와 같이 읍면동 범위까지 통계 확대생산 하는 방안 대하여는 소요예산, 통계안정성, 활용도 등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 필요 * 국가승인통계 중 읍면동 단위 작성통계는 행정자료를 단순집계하는(주민등록인구 현황 등) 현황보고통계가 대부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 신고가격, 거래량 추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주택시장상황을 민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지정·해제 등 적기 대응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7.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공을 철저히하고, 해킹 방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22.9.28 / 12.19) * 정보통신 전문가, 아파트 현장관계자와 홈네트워크 보안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청취 및 논의 ○ 공동주택의 자율적 보안점검·관리를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배포 (과기부 공동, '23.1.2) ○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보안관리 안내서 교육 추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23.3~) ○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관리규약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홈네트워크 관련 유지관리 규정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개선 추진
주택토지실	18. 한국형 표준임대료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용역 진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논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9. 괴정5구역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등 재개발·재건축 영역에서의 부패·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시(8.16) 공사계약서 인가권자 제출, 조합총회 전 사업비 검증완료 등 투명성 강화 방안 포함 ○ 총회전 사업비 검증완료, 시공사 자료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민홍철, '23.1) ○ 재건축·재개발 종합 운영실태 합동 점검 추진('22.11.14.~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정5구역을 포함한 8개 조합을 점검하여 총 108건 적발(19건 수사의뢰, 14건 시정명령, 75건 행정지도)
주택토지실	20.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선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지방은행에서도 해당지역 수요자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은행도 권역내 수요자 대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부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이 권역내 수요자 대출 업무를 수행
주택토지실	21. LH가 보유한 HUG 지분 1.01%를 매각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보유 HUG 지분 매각방안 검토('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G 재무현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에 영향이 없도록 '25년 이후로 매각 연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혁신계획* 변경 협의 <p>*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라 출자 정리, 보유부동산 매각 등의 내용으로 구성</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2.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증세와 건강보험료 대상에서의 탈락 등 고통을 겪고,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의 역전 우려까지 발생한바 이에 대해 조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22.11월)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p>* (공동주택) 당초 72.7% → 하향 69.0% (단독주택) 당초 60.4% → 하향 53.5% (토지) 당초 74.7% → 하향 65.4%</p>
주택토지실	23. 주택건설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 상황 및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 - 분양보증 시장 개방시 HUG와 민간 보증기관이 경쟁은 불가피하며, - 민간 보증기관에는 그간 HUG가 수행해온 정책 기능(미분양 매입, 모기지 보증 등) 기대를 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책기능 상실 - 민간 보증기관의 역량 문제, 시장 양극화(민간 보증기관이 우수업체만 보증 발급 가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지속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4. 읍면동 단위 주택 가격을 조속히 공시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등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지역에 대한 면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특정 읍면동 지역에 대하여 주택가격동향 상세조사를 실시중 - 다만 현재 생산·공표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주택가격통계와 같이 읍면동 범위까지 통계 확대생산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소요예산, 통계안정성, 활용도 등 측면에서 중장기 검토 필요 * 국가승인통계 중 읍면동 단위 작성통계는 행정자료를 단순집계하는(주민등록인구 현황 등) 현황보고통계가 대부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 신고가격, 거래량 추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주택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지정·해제 등 적기 대응 예정
주택토지실	25. 구도심의 경우 조정 지역을 해제하여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23.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6. 부동산·주택가격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의 정책은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이므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이 심화되며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고 서민 주택공급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규제개선 추진 - 재건축·다주택자 세제 개선 등 규제 개선은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하는 취지로서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 등은 종과 체계는 유지하되 부과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 등도 보완 추진
주택토지실	27. 주택청약제도를 젊은 층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민영주택 일반공급 구분을 세분화(2→3)하고, 중소형 주택(85㎡ 이하)에 대해 추첨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주택토지실	28. 원도심 조정지역인 서울 중구·노원구, 경기 단원구, 남양주시,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의 경우 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제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23.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29. 구도심,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연착륙을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23.1.5)
주택토지실	30.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 시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제도 규제지역 지정 전 의견조회시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제출 중 ○ 아울러 주택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의 해제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해제 요청시 국토교통부는 주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 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 운용 중 *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2 ** '22.9.26, '22.11.14, '23.1.3 규제지역 검토시 시도는 시군구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 향후 규제지역 검토 시 시군구 의견 수렴 등 현장 목소리 수렴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31. 지방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23~'27) 수립('23.1.3) - 주거불안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 <p>* 전체 공급물량의 86%(43만호)를 저소득층 배분</p>
주택토지실	32. 주택도시기금 기금 운용심의회에 민간인도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심의회에 민간인 기 활동 중 - 위원 10명 중 7명이 민간인으로 구성 (교수, 연구원 등)
주택토지실	33. 공공토지비축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의 내용 상충으로 인해 토지은행 적립금의 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23.6)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토지은행사업 재원으로서 지속 적립 중인 토지은행적립금의 적극 활용방안 마련 추진 <p>* 공공토지비축 활성화 방안 연구/'23.1-6월</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은행적립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34. 주거급여 수급률이 72%에 불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상시홍보, 지역별 주거급여사업소(LH, 51개)와 지자체 담당자간 상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규수급자를 지속 발굴 - '22.12월 기준 수급권자는 162.9만가구로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능 대상가구 약 180만가구 대비 90% 수준
주택토지실	35. 주거급여 관련 신청 주의의 제도적 한계, 적극적인 발굴행정의 미비로 인해 수급률이 낮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상시홍보, 지역별 주거급여사업소(LH, 51개)와 지자체 담당자간 상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규수급자를 지속 발굴 - '22.12월 기준 수급권자는 162.9만가구로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능 대상가구 약 180만가구 대비 90% 수준
주택토지실	36.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상시홍보, 지역별 주거급여사업소(LH, 51개)와 지자체 담당자간 상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규수급자를 지속 발굴 - '22.12월 기준 수급권자는 162.9만가구로 전체 주거급여 수급가능 대상가구 약 180만가구 대비 90% 수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37. LH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대표기구인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 확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기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련하여 준용 중인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제도* 운영 중('19.2~) * (제52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 사업자: 임차인에 대한 대표회의 구성 통지·지원 의무 등 ○ 현재 법령상 의무협의 사항* 외 표준관리규약(LH)에서 주택관리업자 교체(제26조의2), 회계감사 요구(제47조) 등 실질적 권한 부여 중 *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주택토지실	38. 공공택지 추첨제 벌떼 입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사1필지 제도* 도입 등 택지공급제도** 개선 완료('22.10.26) * 택지청약에 참여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를 1필지당 1개사로 제한(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 용역계약 없이 직접 미수행 시 계약해제 및 택지공급 제한(3년)하고, 택지계약 등 업무 대리인 범위를 2년 이상 재직중인 소속직원으로 한정
주택토지실	39. 층간소음 개선방안으로서 사후확인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벌칙 기준 마련, 준공검사 연기, 명백한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확인제 손해배상 및 사후권고(보완시공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확인 결과 기준 미달 시 손해배상 및 보완시공 권고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안전관리원 연구용역 진행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용역 완료 후 사후확인제 손해배상 및 사후권고 기준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40.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에 따른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국토부·지자체 업무담당자 간 간담회 개최('23.2)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 위반의심 사례에 대한 지자체 조치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조치현황 확인 및 미조치 건에 대한 조속한 조치 요청('23.3)
주택토지실	41. 포항 지진 피해 이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법령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특례규정에 따라 이주민들의 실정을 고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인정**('23.8.2.) * 이주민 우선공급 50%로 확대, 소득 및 자산 요건 단계별 완화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LH가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입주 자격 등을 정하여 임대주택 공급 가능
주택토지실	42. LH 전관예우 의심 사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혁신방안 마련('23.1) - 퇴직자 취업 기업 계약제한, LH 출신 감평사·법무사·변호사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 퇴직자 특혜 감시 위한 준법감시관 업무 확대 등 「LH법」 개정안 발의 추진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43. 집값 하락기의 주택 정책 차원에서 강통 전세 피해주택, 강통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가치보다 부채가 높은 강통주택 공공매입은 형법상 배임 등이 문제되어 현실적으로 곤란 														
주택토지실	44. 공공임대아파트는 재정사업으로서 예산의 확보를 통해 수행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아파트 예산 17.5조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 공급계획 및 수요기관 물량, 정부지원단가 상향* 등 반영 * 건설형 7% 인상, 매입·전세형 호당 0.1~0.2억원 인상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도 확대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table border="1" data-bbox="774 1288 1468 1388"> <thead> <tr> <th>연 도</th> <th>18</th> <th>19</th> <th>20</th> <th>21</th> <th>22</th> <th>23</th> </tr> </thead> <tbody> <tr> <td>전입금(조원)</td> <td>1.0</td> <td>1.7</td> <td>2.4</td> <td>3.6</td> <td>4.3</td> <td>4.6</td> </tr> </tbody> </table>	연 도	18	19	20	21	22	23	전입금(조원)	1.0	1.7	2.4	3.6	4.3	4.6
연 도	18	19	20	21	22	23										
전입금(조원)	1.0	1.7	2.4	3.6	4.3	4.6										
주택토지실	45. LH의 수익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 등 수익을 통한 주거복지분야 교차보조 형태로 계속 운영중 ○ 「LH 혁신방안」 마련·발표('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임대주택 운영·관리에 연 4.71조 투자('18~'22 연평균 대비 57%증가) - 이 중 매년 1천억원을 LH예산으로 별도 편성, 편의·안전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 등에 집중 투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46.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22.11월)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공동주택) 당초 72.7% → 하향 69.0% (단독주택) 당초 60.4% → 하향 53.6% (토지) 당초 74.7% → 하향 65.5%
주택토지실	47.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을 익일 0시가 아닌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포함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항력 발생시점 악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2.11), 한방계약서('23.2) 등을 개정 * 대항력 발생 이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범사업 진행('23.1) * 임차인 대항력 보강을 위해 확정일자정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 - 타 시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범사업 확대 예정 ○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마련·발표('23.2.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48.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고율·손실률을 반영 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요율을 차등화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가율을 당초 100%에서 90%로 변경
주택토지실	49. 한국부동산원이 OECD에 제공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 하여 실거래가 반영을 통해 현실과의 괴리를 축소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동향조사 품질 향상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중 *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운영, 전문가 자문 회의 및 서면 감수 등 ○ 아울러 OECD에 파견 중인 우리 부 직원과 소통하여 주택관련 통계 정보 제공 등 조치
주택토지실	50. 외국인 부동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통계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에 따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 승인 완료('23.3.7.), 5월 공표
주택토지실	51. 외국인에 대한 임대· 대출 현황, 유형별· 국적별·구입목적별 통계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무자격 임대, 편법 대출 등 위법 의심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기 발표* *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22.10월) ○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에 따른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 승인 완료('23.3.7.), 5월 공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52. HUG 신용등급조정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G 신용평가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 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내부위원 직급 격상, 전결권 상향, 회피·제척기준 신설 등
주택토지실	53. LH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기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회적 부작용* 등 종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교차보전 곤란, 이익발생 단지 분양가 인하요구 등 ○ 이에 따라, LH는 원가공개 대안으로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근거, 입주자모집 공고 시 항목별(62개) 분양가 공시* 중 * 총 분양가격을 원가항목 62개로 배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공시
주택토지실	54.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민간임대아파트 수익에 제한이 없는 등 법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내집마련 임대리츠 도입 발표('22.8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동만 의원, '23.6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5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공급촉진에 관한 부분만 있을 뿐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미비한 문제, 3자 매각이 빈번한 문제, 분양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강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제도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지원 없는 민간임대주택(단기·장기 일반)에 대한 매각 강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및 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중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내집마련 임대리츠 도입 발표('22.8월) ○ 지자체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의 임차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협조공문 발송('22.6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동만 의원, '23.6월)
주택토지실	<p>56.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거복지·주거금융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담가능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22.10.26),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통해 금융 부담도 완화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23.1.3)을 통해 청년 특화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거주기간 확대, 청년 월세지원, 전세·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57. 주거의 보편적 복지 보장 측면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원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도는 환수된 재건축초과이익이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재개발·재건축 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포함)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신청하면, 우리부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22.9.29)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발의(김정재의원, '22.11월)
주택토지실	5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도는 환수된 재건축초과이익이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재개발·재건축 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포함)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신청하면, 우리부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22.9.29)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발의(김정재의원, '22.1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59.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공공임대주택 미임대 물량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장기 미임대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도는 환수된 재건축초과이익이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재개발·재건축 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포함)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년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신청하면, 우리부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22.9.29)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발의(김정재의원, '22.11월) ○ 행복주택의 경우 소형 평형 위주 공급으로 인해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비교적 공실이 많이 발생 중* * ('22.12월말 기준 공실률) 영구 5.6%, 국민 1.9%, 행복 5.7% (다만, 영구임대의 경우 노후임대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 제외 시 0.9%) -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세대통합 리모델링(전용16→32㎡) 시범사업 추진 중 ○ 또한,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시 입주 자격 추가 완화 등 공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23.1)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공실률*이 감소 추세로 전환 * ('18) 1.2%→('19) 1.6%→('20) 2.3%→('21) 3.1%→('22) 2.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60. LH가 임대주택의 지하 주차장 등 지하면적 조성비용에 대해 일부 부담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지하주차장 사용료 등 부담을 완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한 공공 임대주택을 LH가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에 지하층 건축비 등 반영 추진 * 지자체, LH, SH 등 공공임대 인수현황 실태 파악('22.12.) 및 의견수렴('23.1.) ○ 인수가격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추진('23.2. 시정요구 의원실과 협의)
주택토지실	61.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시장주도 성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공공임대주택 질적개선, 주거안전망 확충 등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마련('23.1.3) ○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제약 및 경제 충격 우려에 대응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등도 마련('23.1.3) * 규제지역 해제('23.1.5), 전매제한 합리화('23.3), 청약규제 합리화('23.2)중도금대출 규제 폐지('23.3)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62.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에 따라 공공임대 50만호 공급(연간 10만호) 계획을 수립('23.1.3) -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분기별)할 계획
주택토지실	63. 일인당 평균 주거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임차료를 재계측하여, '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원~2.7만원(3.2~8.7%) 인상 * '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결정(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3.7.28) ○ 지원금액을 수급가구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 전월세거래가격,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 상향 계획
주택토지실	64.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부담가능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22.10.26),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통해 금융 부담도 완화 ○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비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 종과 및 LTV 차등적용 체계 유지, 등록임대 최저호수 기준 및 장기임대 유형 신설 등 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22.12.21 경제정책방향, '23.1.3 연두 업무보고) - 시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제도개선도 발표('23.1.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65. 서민 주거 안정 및 지·옥·고 해결을 위해 공공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23~'27) 공공주택 100만호(분양50만호+임대50만호)를 공급할 계획* * (공공분양)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22.10.26) (공공임대)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23.1.3) - 특히, 시세 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공급(14.4→50만호)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
주택토지실	66. 성남판교지구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성남시와 LH 간 협의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와 성남시 간 쟁점사항 대부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22.11)하였으며, 소송중인 개발부담금과 법인세는 판결('24.예상) 이후 별도 협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자와 세부 협의를 거쳐 중단 중인 정산용역 재개('23.6.)
주택토지실	67. 공공토지 비축과 관련하여 토지은행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 비축 계획과 상충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23.6)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토지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는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 공공토지비축 활성화 방안 연구('23.1~6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 및 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예정('2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68. 실효성 없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인증 중 내구성 평가항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명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상호 인정·통합을 위해 녹색건축인증 중 내구성 기준 개정 완료
주택토지실	69. 장수명 주택 건축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장수명 주택 건축 유인 정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대상 및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세대 이상 공급시 의무*로 되어있는 장수명 인증을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p>* 「주택법」 제38조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2항</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명 주택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23.12)
주택토지실	70. LH 오리역 사옥 개발 로비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사옥 매각 및 개발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절차의 적법성 등 점검('23.5) ○ 미흡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 및 개선사항 마련(~'23.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71. LH가 분양이익을 통해 많은 순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로 부터 특별수선금을 총당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부담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기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수선총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공공주택사업자(LH)가 기 적립 중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
주택토지실	72. LH의 공공앱이 실제 사용자에게 비해 개발비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공공앱 활용도 제고방안 점검('23.3) * ① 대상자 확대(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추진, 스마트홈 적용주택 증가 등), ② 사용자 중심 기능개편 (4개앱), ③ 홍보강화 등 ○ 향후 이용자 추이, 앱 개선 및 홍보실적 지속 점검·관리 추진
주택토지실	73.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자체에 대한 제재가 현행법에 미비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가능하며, * 현재, 보증회사는 보증사고 1회 이상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가입을 거절 중 - 보증회사의 보증가입이 불가능 해 보증미가입으로 등록 말소 시 2년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가능(법 개정, '23.6월) - 지자체에서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정보와 임대등록 정보 연계 완료('23.6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74.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가 80% 이내인 경우에 한해 보증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가율을 당초 100%에서 90%로 변경 - 전세가율을 80%로 낮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
주택토지실	75.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 강서 센터('22.9.28.~), 인천('23.1.31.~)
주택토지실	76. 주택도시기금 중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여유자금 규모 감소 * '21년 48.9조 → '22년 28.7조 (말잔 기준) - 적정 여유자금 규모 유지를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여유자금 증대방안 강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77. 주택도시기금의 사업 부문 운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보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사업 운영평가 보완·개선 - 임대주택출자사업의 재정집행률(84.5%) 및 공실률 증가 등으로 평가결과가 다소 부진 - 재정집행 독려, 입주 자격 완화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공실률 감소로 '21년 대비 '22년 지표 개선 <p>* 제도개선 : 입주계층 변경(예: 청년→신혼부부)시 계속 거주 허용 및 타 행복주택 재청약 허용('22) 등</p> <table border="1" data-bbox="774 974 1469 1171"> <thead> <tr> <th>구분</th> <th>21년</th> <th>22년</th> </tr> </thead> <tbody> <tr> <td>임대주택출자 재정집행률 (집행/예산)</td> <td>84.5% (51,074억/64,606억)</td> <td>93.2% (49,652억/53,276억)</td> </tr> <tr> <td>임대주택 공실률</td> <td>3.1%</td> <td>2.1%</td> </tr> </tbody> </table>	구분	21년	22년	임대주택출자 재정집행률 (집행/예산)	84.5% (51,074억/64,606억)	93.2% (49,652억/53,276억)	임대주택 공실률	3.1%	2.1%
구분	21년	22년									
임대주택출자 재정집행률 (집행/예산)	84.5% (51,074억/64,606억)	93.2% (49,652억/53,276억)									
임대주택 공실률	3.1%	2.1%									
주택토지실	<p>78.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실제 건축주가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서 건축물을 짓고 대출· 전세보증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구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 가율을 90%로 낮추는 등 무자본갭투자를 근절하고, -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단축 (6개월 → 3개월)하는 등 악성임대인이 시장에서 퇴출토록 조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79.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미임대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의 경우 소형 평형 위주 공급으로 인해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비교적 공실이 많이 발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월말 기준 공실률) 영구 5.6%, 국민 1.9%, 행복 5.7% (다만, 영구임대의 경우 노후임대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 제외 시 0.9%) -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세대통합 리모델링(전용16→32㎡) 시범사업 추진 중 ○ 또한,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시 입주자격 추가 완화 등 공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23.1)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공실률*이 감소 추세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1.2%→('19) 1.6%→('20) 2.3%→('21) 3.1%→('22) 2.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80. 공공주택 건설 분야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현제도 물가변동 등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LH에서 설명회 개최('22.8)와 공문 발송('22.4, '22.7, '22.10) 등을 통해 조정절차 및 요령을 안내하고 있음 * 계약금액 증액을 위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가 필요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23.3.)을 통해 사업비 조정 근거 신설 등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LH 자체기준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민간건설사 대상 의견수렴('23.5.)을 통해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활용 방안을 안내할 예정 ○ 민간건설사와 지속 소통을 통해 주요 쟁점 해소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81.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학자금 장기상환·장애인 연금 등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범 정부적 조정을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22.11월)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p>* (공동주택) 당초 72.7% → 하향 69.0% (단독주택) 당초 60.4% → 하향 53.5% (토지) 당초 74.7% → 하향 65.4%</p>
주택토지실	82.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속하게 개편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 ('22.11월)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p>* (공동주택) 당초 72.7% → 하향 69.0% (단독주택) 당초 60.4% → 하향 53.5% (토지) 당초 74.7% → 하향 65.4%</p>
주택토지실	8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비합리적 규제를 완화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소단위가 법정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정('22.10.17) 및 지자체 배포('22.10.2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8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미온적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자료정비 기능 보완 등 지원 방안 마련 중 ○ 아울러, 전국의 지적 도면을 점검하여 잔여 오류 현황을 파악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
주택토지실	85.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MOU) 체결('22.11.21) ○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3.8.14) <p>※ '23.8.22 공포·시행</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86. 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기본계획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국민임대주택 포함 등을 검토하는 제2차 장기임대주택 기본계획('24~'28)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p>*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연구 / LHI / '23.3월-'23.8월</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23.12) - 기본계획 수립 시 시설개선사업 국민임대주택 포함 등 검토 및 기재부 협의
주택토지실	87.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시 퇴거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위기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과 주거안정 기회를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LH 주거지원위원회 분과*' 제도 도입('22.12) <p>* 명도소송 제기 전 체납사유, 체납해소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명도 소송 유예세대와 소송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등과 연계 추진</p>
주택토지실	88.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건설임대 지원단가 7% 인상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p>* 건설형 7% 인상, 매입·전세형 호당 0.1~0.2억원 인상</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89. 현실화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인해 주택품질과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조속히 개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하여 전년대비 표준건축비를 9.8% 인상한 관련 고시* 개정 고시 완료('23.2)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
주택토지실	90. 페이퍼컴퍼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에도 1사 1필지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방식과는 달리 경쟁입찰방식은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경쟁평가방식은 평가 1위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므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22년 평균 경쟁률) 추첨 58:1, 입찰 7:1, 경쟁 3:1 ** '22년 경쟁입찰로 공급한 17필지의 신청업체 계열관계를 분석한 결과 벌떼입찰 없음 판단
주택토지실	91.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올레가 LH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LH)의 기부금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시행('23.2~'23.3, LH) ○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 지원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요청('23.5월) ○ 제도개선(안) 마련('23.7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92. LH의 부채 및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혁신방안」 마련·발표('23.1) - 부채비율을 '26년까지 207%로 감축 * 불필요 자산·출자회사 정리 등 - 비핵심 기능 폐지·축소
주택토지실	9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근간인 주택 가격 산정체계를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적용하고, - 감정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등 조치
주택토지실	94. 건설임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반공급에 대한 임대료도 특별공급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는 여러 공적 의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일반공급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95% 이하) - 과도한 임대료 인하 시 사업성 저하로 임대주택 공급 위축이 예상되므로 사업장별 민간임대주택법령 규정 준수 여부 모니터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95. 건설임대 활성화와 관련하여 민간부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 비율 상한 또는 기부채납 의무에 있어 공공택지 지원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리츠 규제완화('22.9월)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개편안 마련('22.12월)
주택토지실	96. 허위, 과대광고, 지나친 분담금 등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인 용역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합동 주택조합 실태 점검 실시('2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국 581개 조합 결과 : 형사고발 12건, 시정명령 127건, 행정지도 371건 등 처분 ○ 주택조합 해산 총회 이행실태 점검 실시(~'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사업 지연 시 조합 해산 총회 의무 규정* 관련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주택법」 제14조의2 <p>※ 용역 추진으로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태 점검 추진 예정</p>
주택토지실	97. 임대차 3법 개선과 관련하여 상생임대인 인센티브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용역 진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논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98.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여 담합행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21.4, 조응천 의원), 국회 계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
주택토지실	99.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분기~4분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명시의무위반, 광고주체위반, 허위매물 등 9,904건의 위법의심 표시·광고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 '22.4.~'22.1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거래완료 후 방치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5,103건의 위법의심 표시·광고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 국토부·경찰청 합동으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매물에 대한 특별단속 추진('2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조사·분석 및 불법 광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관할 지자체 통보('23.1) 및 경찰청 1차 수사의뢰('23.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00. 전북 익산 등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서울권 신규 정비사업 수요조사 실시, 사업컨설팅·정비사업 상담센터 운영 등 지방 정비사업 지원 개시('22.10~) ○ 민간·공공정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2.8.18., 9.27.) <p>* 역세권 내 민간정비 용적률 인센티브(기부채납 전제), 공공재개발 의무건설 주택 비율 완화 등</p>
주택토지실	101. 층간소음 사후확인 측정이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므로,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해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확인제 손해배상 및 사후권고(보완시공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사후확인 결과 기준 미달 시 손해배상 및 보완시공 권고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p>* 국토안전관리원 연구용역 진행중</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확인 샘플세대 비율 점진적 확대 검토 - 측정기관 등 제반여건과 사후확인제 운영경과 등을 고려하여 샘플세대 비율 확대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02.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 입주전망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및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역별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남3구·용산구 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23.1.5)
주택토지실	103.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택시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토록 의견 청취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규제지역 지정 전 의견조회 시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제출 중 ○ 아울러 주택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의 해제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해제 요청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 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 운용 중 *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2 ** '22.9.26, '22.11.14, '23.1.3 규제지역 검토시 시도는 시군구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 향후 규제지역 검토 시 시도 및 해당 시군구 의견 수렴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04. 청약에 당첨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이 안 돼 청약이 취소 되는 문제 등 선의의 피해를 막을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당첨된 사람의 처분 서약 의무를 폐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주택토지실	105.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 기존 추진 중인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세 변경 등 제도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변동, 시세재조사 등을 토대로 조합-임대사업자(리츠) 간 매매가격 조정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 <p>*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2.12~'23.1) → 자체규제심사('23.2) → 국조실 규제심사 완료 및 발령('23.6)</p>
주택토지실	106.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22.8) 이후 청년층 등 수요 기반의 구체적 공급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위원회 자문 및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내집마련 수요 분석 ○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발표('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홈 사전청약을 통해 '23년 총 1만호* 공급('23.6월 발표) 추진 중 <p>* '23.6월 2천호 사전청약, 9월 및 12월 추가 공고</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07. 신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신탁 보수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관련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9) - 행정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2.9.27.) <p>* 신탁사업 시, 정비구역·시행자 동시지정, 정비 계획·사업계획 통합처리, 표준계약서 도입 등</p>
주택토지실	108.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저리융자 등의 소규모 도심 정비사업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소규모정비, 공공재개발 사업비 지원(이차보전) 개시 ('22.12. 신규예산 배정)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반영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2.8.18., 9.27.) <p>* 통합심의 의무화, 정비계획 변경·사업시행 인가 통합심의 등</p>
주택토지실	109.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래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공급 확대를 노력하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이주하는 원주민도 임시 사용거처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3.8월)* <p>*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10.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분기~4분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명시의무위반, 광고주체위반, 허위매물 등 9,904건의 위법의심 표시·광고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 '22.4.~'22.1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거래완료 후 방치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5,103건의 위법의심 표시·광고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 ○ 위반의심 사례에 대한 조치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조치현황 확인 및 미조치 건에 대한 조속한 조치 요청('23.3)
주택토지실	<p>111. 부동산 허위매물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 별 담당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련 국토부·지자체 업무담당자 간 협의회 개최('23.2)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및 회신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 및 회신 시 시스템 활용방안 등 논의 ○ 지자체 담당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허위매물 모니터링 조치결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23.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1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자격요건 완화시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적지원(기금출자 등)이 투입되는 만큼 무주택자 등에 우선공급 및 임차인 자격요건 완화시기* 유지 필요** * 현재 일반공급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임차인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모집(유주택자 포함) 가능 ** 자격요건 완화시기(예:입주지정 개시일→임차인 모집 6개월 후)를 완화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저해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와 차별성이 없어지는 문제 발생 <p>- 다만, 시장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p>
주택토지실	<p>11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가 불합리한 소급정책이 아닌지 검토하고, 보증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 시행 이전 등록사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 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 의무 유지 필요 * 기존 등록임대 주택 보증가입 의무 확대 법률 개정 시('20.8)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1년의 유예기간('21.8) 종료 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가입의무 발생 → 일반적인 임대차기간(2년) 고려 시 전면 시행은 '23.8 이후 적용 <p>- 다만, 지속가능한 등록임대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중</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14.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폐지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은 등기부 열람을 통해 부동산 법률관계 및 근저당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 부기등기 제도 유지 필요 - 부기등기 폐지 시 임대차계약 신고 및 설명의무 이행 등 담보가 어려워 임차인 권리보호가 취약해질 우려
주택토지실	115. 부기등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말소시 공공이 촉탁등기로 부기등기하고, 말소처리하도록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촉탁은 관련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중 - 부기등기 의무를 규정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고 있는 점 감안 시 현행 유지 필요
주택토지실	116.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 등기의 접수 순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항력 발생시점 악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2.11), 한방계약서('23.2) 등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항력 발생 이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범사업 진행('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대항력 보강을 위해 확정일자정보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활용 - 타 시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범사업 확대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17. 사전청약 가점 도입이 벌떼입찰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한 특정 건설사들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청약 가점 적용 잠정 중단('22.9) ○ 벌떼입찰 의심업체 10개사 경찰수사 의뢰('22.10) 및 71개사 현장점검('22.10 ~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개사 점검결과 19개사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23.3) 및 13개사 경찰수사 의뢰('23.4) * 3년간('19~'21) LH 공동주택용지 당첨 101개사 중 행정처분요청 29개사, 수사의뢰 23개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청약 가점 재개시 위법업체는 사전 청약 가점 축소 등 조치할 계획
주택토지실	<p>118. 1사 1필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떼입찰 방지를 위한 1사1필지 제도 도입 시 업체들에게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여 적용(~'2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19. 중흥건설의 목포시 해당지구 중흥S클래스 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혜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는 중흥S클래스 사업계획 승인 시, 용적률 923.89%, 건폐율 84.89%로 당시 국토계획법 및 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 내에서 승인('18.7월) * 중심상업지역 용적률(법 1,500%, 조례 1,300%) - 이후 해당 사례와 같은 상업지역 내 과도한 주거기능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차등규정 도입(목포시 조례 개정, '21.12) 확인 *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주거면적비율 80~90% - 용적률 600% / 주거면적비율 10%미만 - 용적률 1,300% 등)
주택토지실	<p>120.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LH 공급촉진지구 중 상위계획에 배치되거나, 타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지구(12곳)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위반 의심으로 지적된 공급촉진지구(12곳)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며 지자체 협의, 제영향평가, 중도위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향후 촉진지구 사업과정에서도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등 상위계획 및 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21.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원주민들의 입장·의견을 고려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이주하는 원주민도 임시 사용거처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3.8월)
주택토지실	122. 공공주택법령 등에 의한 사업의 정부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도입('12)하여 현재 제도* 운영중 *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 - 또한 최근 원자재값 인상으로 민간 시행자의 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음('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뉴홈 등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23. 평가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개인 감정평가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가 감정평가법인과 사무소를 추천하는 경우 적정하게 배분하되 인당 추천받는 금액을 법인은 70억에서 150억까지(수도권 외 100억) 사무소는 100억에서 150억까지(수도권 외 100억) 상향조정('23.4월) 하였음 * 또한 법원 경매·소송, 캠프 감정시 사무소와 중소기업 위주로 참여하고 있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 조달 감정평가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감정평가액 환산시 2,080억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주택토지실	124.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 상향을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건설임대 지원단가 7% 인상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 건설형 7% 인상, 매입·전세형 호당 0.1~0.2억원 인상
주택토지실	125. LH 양산덕계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검토 중이며 올해 7월 지구계획 신청 예정 - '24년 내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나 승인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LH·지자체와 적극 협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26. 화성시 안화동 주공 6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레인지후드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노후화, 외부페인트 재도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지의 레인지후드 교체, 엘리베이터 노후화, 외부페인트 재도장 등 관련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LH가 조치 토록 지도 - LH는 주방가구, 도장상태 등 현장 확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행 및 수선 대상단지 확정('22.11~'23.2)
주택토지실	127. 분양대행업 통합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 근거, 대행자의 요건, 분양사업자의 교육 의무 등이 반영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발의(정동만의원, '22.12.2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분양법」 개정 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추진
주택토지실	128. 공동주택의 회계전산 업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압도적 독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전산프로그램 시장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22.12) - (공정위) 현재로서는 회계전산프로그램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사항 ○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29. 지원주택 시범사업 전국적 실시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장애인 지원주택* 공모 실시('22.8)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주택토지실	130. 매입임대주택의 30%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매입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약자용 매입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1만호), 고령자(0.2만호) 등 주거약자용 주택 1.2만호(34%) 공급계획 수립('23.2) ○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19.3)하여 시행중
주택토지실	13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개인의 장애와 필요도에 따라 주택개조범위와 지원예산범위를 넓혀 개인맞춤 주택개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을 증액(17.1억→28.5억) 확보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개인의 장애와 필요도까지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을 중기계획('23~'27) 부처안에 확정 반영 * '23년 28.5억원 → '24년 45억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32. 장애인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인상하고,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지원한도 상향('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구 대상 '23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일반유형) 0.1억 상향 '22년(수도권 1.2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23년(수도권 1.3억, 광역시 0.9억, 기타 0.7억) ○ 그간 기준임대료를 지속 인상하여 최저주거수준의 시장임차료 수준까지 상향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을 수급가구가 부담하는 실제임차료, 전월세거래가격,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 상향 계획
주택토지실	133.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하여 실거주 사유 악용을 막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피해 임차인을 보호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설치 및 관할지역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10개소, LH 2개소 운영중 ○ '23년 추진계획 수립('23.1) 및 정상운영중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속 운영을 통해 임차인 보호 적극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3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10개월이나 걸리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단축) 신청서 작성, 사건접수, 통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22.3.) * '21년 국감 시 장경태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21년 국감 지적사항에 따라 용역 추진('21.7.~'22.3.) ○ (신청건수 감소) 조사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당국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였고, 하자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사례집' 발간('22.11.)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대표적 사례 96건(하자심사 76건, 분쟁조정 11건, 재심의 8건, 판례 1건)
주택토지실	135.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센터가 반지하 침수피해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상담 및 복지기관·지역자원 연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역할 등 표준매뉴얼 마련 추진 ('23.2.~)
주택토지실	1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하여 엄벌하고 위반행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아파트 이상고저가 직거래 기획조사, '22년 1,2분기 신고분 상시조사 등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1,630건) 관계기관으로 통보 완료 ('22.10~현재) - 향후에도 외국인 토지투기 기획조사, 전세사기 위험지역 다주택자 기획조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조사·분석하여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37. 청년·신혼부부 주택 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급감하고 연체자연체자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2023년 기금운용계획) <table border="1" data-bbox="770 573 1465 685"> <thead> <tr> <th>항목</th> <th>생애최초</th> <th>신혼부부</th> </tr> </thead> <tbody> <tr> <td>대출요건</td> <td>LTV 70%→ 80%</td> <td>주택가격 5→ 6억</td> </tr> <tr> <td>대출한도</td> <td>2.5억→ 3.0억</td> <td>2.7억→ 4.0억</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차주의 원금상환 유예조건을 확대해 질병·재난 등이나 일시적 소득감소로 연체되지 않도록 지원(대출업무시행세칙 개정. '23.01.) 	항목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요건	LTV 70%→ 80%	주택가격 5→ 6억	대출한도	2.5억→ 3.0억	2.7억→ 4.0억
항목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요건	LTV 70%→ 80%	주택가격 5→ 6억									
대출한도	2.5억→ 3.0억	2.7억→ 4.0억									
주택토지실	138. 부정청약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약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조치(주택환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행사가 계약취소 조치를 적극 이행하도록 관리 강화 - 계약취소 추진현황 모니터링·관리('23.2.) * 형사재판 진행, 계약취소 소송 등으로 주택환수까지 상당기간(통상 3~5년) 소요 									
주택토지실	139. 하자보수이행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등록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시스템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이행 시스템 구축*('22.12)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용역 추진('22.10.~12.) - 미등록 사례는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등록율을 제고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40. LH 건설현장 법정 감리인원 배치 개선 방안과 석면 등 철거 작업 전 유해물질 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9.7) 이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법적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중 - 개정 전 발주현장은 「공사감독자 운영 방안 계획」('22.5월 수립)에 따라 감리 전환 등을 추진 중 * 17개 지구 중 8개 전환 완료, 9개 추진 중 ○ 「건설현장 순환자원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3.1)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동영상 제공 및 표준과업지시서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 이행력 제고
주택토지실	141. 악성 임대인과 관련 하여 보증기관과 대출 기관의 공조를 통해 채권회수 업무를 강화 하고, 만성·고액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23.02.27.) * ❶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병훈 의원, '21.5.6)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인 정보를 공개 ❷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21.9.24)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 ○ 기금법 개정으로 악성임대인에 대한 명단공개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42.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갈등 중재권한도 부여하여 시공사와 조합원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과 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19년에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검증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연도별 공사비 검증 현황 ></p> <p style="text-align: right;">(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790 734 1476 994"> <thead> <tr> <th>구분</th> <th>건수</th> <th>검증 대상금액</th> <th>검증 결과금액</th> <th>감액 금액</th> <th>감액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누계</td> <td>70</td> <td>56,909</td> <td>43,275</td> <td>-13,634</td> <td>-24.0%</td> </tr> <tr> <td>22년</td> <td>32</td> <td>21,188</td> <td>16,888</td> <td>-4,300</td> <td>-20.3%</td> </tr> <tr> <td>21년</td> <td>22</td> <td>18,244</td> <td>13,650</td> <td>-4,594</td> <td>-25.2%</td> </tr> <tr> <td>20년</td> <td>13</td> <td>15,685</td> <td>11,054</td> <td>-4,631</td> <td>-29.5%</td> </tr> <tr> <td>19년 이전</td> <td>3</td> <td>1,792</td> <td>1,683</td> <td>-109</td> <td>-6.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시공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합은 공사비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 검증을 토대로 총회의결을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3.1.12) 	구분	건수	검증 대상금액	검증 결과금액	감액 금액	감액 비율	누계	70	56,909	43,275	-13,634	-24.0%	22년	32	21,188	16,888	-4,300	-20.3%	21년	22	18,244	13,650	-4,594	-25.2%	20년	13	15,685	11,054	-4,631	-29.5%	19년 이전	3	1,792	1,683	-109	-6.1%
구분	건수	검증 대상금액	검증 결과금액	감액 금액	감액 비율																																	
누계	70	56,909	43,275	-13,634	-24.0%																																	
22년	32	21,188	16,888	-4,300	-20.3%																																	
21년	22	18,244	13,650	-4,594	-25.2%																																	
20년	13	15,685	11,054	-4,631	-29.5%																																	
19년 이전	3	1,792	1,683	-109	-6.1%																																	
주택토지실	143. 필로티 건축물과 관련하여 '18.12월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 안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설계 미반영 필로티형 매입임대 주택 내진보강 방안('23~'25, LH)'에 따라 내진설계 미반영 필로티형 주택 우선 내진보강 시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월 이전 매입임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검토('23.下)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44. 1자녀, 2자녀 신혼 부부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등이 내 집마련 기회를 위해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2023년 기금운용계획) <table border="1" data-bbox="769 636 1465 748"> <thead> <tr> <th>항목</th> <th>생애최초</th> <th>신혼부부</th> </tr> </thead> <tbody> <tr> <td>대출요건</td> <td>LTV 70%→ 80%</td> <td>주택가격 5→ 6억</td> </tr> <tr> <td>대출한도</td> <td>2.5억→ 3.0억</td> <td>2.7억→ 4.0억</td> </tr> </tbody> </table>	항목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요건	LTV 70%→ 80%	주택가격 5→ 6억	대출한도	2.5억→ 3.0억	2.7억→ 4.0억
항목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요건	LTV 70%→ 80%	주택가격 5→ 6억									
대출한도	2.5억→ 3.0억	2.7억→ 4.0억									
주택토지실	145. 사회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원 리츠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토록 세제당국과 협의하였음 *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보완 추진 내 개선계획 발표(기재부, '23.1.26)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기재부) 									
주택토지실	146.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재건축 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결국 재건축의 지연·보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와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 필요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법률개정안 발의(김정재의원, '22.1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47.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이수율 제고 및 현황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 활성화 자료 배포 및 이수 독려 요청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국토부) '22.1.3, '22.3.3, '23.2.13 (LH) '22.8.22, '22.11.02 - 매년 교육 이수율은 향상 추세 * '20년(54.6%) → '21년(63.2%) → '22년(68.7%)
주택토지실	148.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독려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괴롭힘 방지규정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에 대하여 경기도 등 17개 시·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 요청을 완료 ('22.10) * 주택건설공급과-7821('22.10.27.)
주택토지실	149.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간접흡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마련*('22.10 국토부, LH)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후 최종본 배포 예정 ○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자료 제작·배포('23.6)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관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중('23.7~11) ○ 향후 층간소음 완화, 간접흡연 불편 최소화를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배포('23.下)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p>150.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 상황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진단 관련 지자체 간담회('22.11.1,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마련 ('22.12.8.) 및 합리화 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국토부 고시)」 개정 완료 ('2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비중 완화 (50%→30%), 주거환경은 확대(15%→30%),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30~55점→45~55점), 적정성검토 개선(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 ○ 1기 신도시와 같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2.9.29.) **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추진계획 점검 (장관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 '23.1.1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51. 재해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태풍(8~9월)으로 인한 도시 침수, 주거 취약가구 피해 등 발생에 따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해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 - 이를 기반으로 재해취약주택 정비, 인허가 규정 정상거처 이주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3.2)
주택토지실	152. 건축 구조적인 차원에서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 층간소음에 강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용역* 추진 중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연구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멘구조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개선 제도개선 방안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토지실	153.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대기업들의 하자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제고하고, 사업 주체 및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개선 방안’ 마련(’23.3) -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하도록 감리자에게 공사완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치결과에 대해 품질점검단 및 지자체 확인을 받도록 함 <p>*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하자보수기한 명확화, 감리자 확인 의무 부여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3.上) 추진
주택토지실	154. 건설단가는 상승한 반면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삭감된바, 임대 주택 품질 개선과 공급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로 주택 품질을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건설임대 지원단가 7% 인상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p>* 건설형 7% 인상, 매입·전세형 호당 0.1~0.2억원 인상</p>

□ 건설정책국 (40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p>1. 안전진단업체의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저가 입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발주기관·연구기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점검·진단 용역의 저가계약 해소방안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22년 2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진단 저가계약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3.5~12)하여 개선 방안 마련('24.2월)
건설정책국	<p>2. 콘크리트 품질기준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에 추가하는 물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방서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의 경과규정 중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으로 인해 이미 설계 중인 공사가 검사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태 조사 및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표준시방서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재행정 예고('23.1.29.) * 단위수량시험을 현장에 조속히 적용토록 부칙 개정 추진중이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진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 관련 비용 분석('23.10월)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심사 추진 및 결과에 따라 개정 고시('23.12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3. 건설시장 내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업체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일 집중단속 및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 시스템 고도화 등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23.5.11) 발표
건설정책국	4.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조직 구성('22.12.16) - 건설정책국 내 불법행위 근절팀 신설 * 팀장1, 사무관 4, 주무관 4
건설정책국	5.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통합적 대처를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실무TF 구성('23.1.6) - 국조실·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기재부 등이 참여한 TF에서 제도개선 방안 및 대책 논의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정부합동, '23.2.21)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후속대책 발표(당정협의, '23.5.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6.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 산업개발의 보상, 지원,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현장 안전지원 TF를 구성* ('22.6.3~)하여 매주 현장확인 실시 및 월 1회 합동점검 등을 통해 추가 붕괴 등 사고가 없도록 지원 - 기둥, 벽체 등 잔재물 해체완료('23.1.2) 이후 해체 작업을 위해 설치한 타워 크레인도 철거 완료('23.1.6) <p>* 이재민(2.18), 유가족(2.22), 입주예정자(10.18) 보상합의 완료</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22.3.28)」 마련하여 시공품질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처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건설정책국	7. 건설 자재, 노임, 기계 임대료 등의 급변으로 인해 민간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을 활성화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사의 계약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약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예정('23.8) <p>*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중('23.8.3~8.23)</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8.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가 기존 협회에서 공공기관인 건설산업정보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실적을 양쪽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하기로 업계와 협의 완료
건설정책국	9.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대금 지급 시스템 - 전자카드제 연계’ 의무화를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23.5.11) 발표
건설정책국	10.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입찰제한을 부여받은 건설사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액의 약 8%만이 조성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는 자율적으로 2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15.8)하였으나, 업계 미온적 태도로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음 - 정부와 국회는 지속 독려하여, 그 결과 ’18.8월 업계에서 매년 운영기금을 납부하기로 약속서 제출 ○ 약속서에 따라 매년 20억원(시평 상위 10개사)을 정상 납부 중이며, 지속 독려(공문 시행, ’23.5.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p>11. 공공계약 장기계속 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하는 간접비를 시공사가 떠안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 귀책 사유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이 아닌 해당 연차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여 간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재부 계약 예규, '20.6월) ○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 변경시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 계약법 개정(안)* 발의 <p>* 김수흥('22.11) 송언석 의원('23.2)</p>
건설정책국	<p>12. LH의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중소건설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어, 꼭 필요한 공사에만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에서는 기술심의를 통해 특화설계 구현, 연약지반 처리 등 특별한 설계, 시공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에만 한정하여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발주 중 - 또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규 참여업체 가점 부여 등 기준 마련 완료('22.7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낙찰 기업에 대한 기술제안서 비용 보상 강화 기준 개정 완료('23.6.1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3.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적격성조사의 검토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격성조사 수행기관 확대 등 개선방안을 기재부와 협의('23.2) - 민자적격성조사 신속추진 지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기재부, '23.4.6)
건설정책국	14.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역 폐지 문제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와 관련해 시설물유지업자의 연착륙 및 전환을 위한 유예 또는 합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7,068개 업체 중 5,929개(약 84%)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업종 전환 완료('23.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업종 전환 현황 지속 모니터링 추진
건설정책국	15. 타워크레인 금행료 등 부조리 관행에 대해 점검을 하여 시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례를 일제조사('22.12.30~'23.1.13),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23.2.21) ○ 5개 국토관리청에 권역별로 전담조직 구성('23.1.11) 현장 상시 점검 중 ○ 부당금품 강요 수수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기준 마련('23.3.2~) - 향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등 추진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특별점검 등 실시('23.3~4) ○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상시 점검 지속 실시('23.1~, 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6. 건설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건설업 신고·등록제를 면허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근절을 위한 상시 실태조사 및 처분 중으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중임 *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월단위 주기적 실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9.4월)은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한 것임 - 따라서, 건설업의 면허제 변경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건설정책국	17.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원에 독자적 현장 점검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초지자체가 인·허가한 공사현장 관리 강화 추진 *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22.8.22, 김학용의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시자에게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국토부의 점검·조사 업무의 대행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강력한 관리 감독망을 구축 * 국회 계류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3년 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18.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진단 우려 대상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선택·집중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평가대상 조정안 마련('23.下)
건설정책국	19. 국토안전관리원은 148개 전담 시설물에 대하여 점진적인 민간이양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시설물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주체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2.14~2.24)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회의(2.22, 3.22), 시설안전협회협의(4.7)를 통해 조정안 논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안전관리원 전담시설물 고시 개정('23.下)
건설정책국	20. 국토교통부 소관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과 같이 안전관리의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연2~3회) 및 정밀안전점검(1~4년 주기)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을 비롯한 10년 이상 경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4~6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 보수·보강 조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21.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한바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안전 사고 근절방안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적용된 NRC 공법의 사고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타설 순서 보완 등 사전 절차 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콘크리트 타설 엄정 관리, 관리자 역할 강조 등 업계 의견수렴·공유 - 사고근절 방안 주요 내용을 건설안전 로드맵 반영 추진 * NRC 공법 : 모듈(거푸집+철근)을 공장 생산하여, 현장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법
건설정책국	22.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경우 경영개선이 D이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 경영성과 책임과 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23.3월)
건설정책국	23. 선별·파쇄골재 관련 건설현 내 토석 분리 배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과 골재 품질기준에 토석 관련 기준을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 품질기준에 토분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 ('22.10~'23.1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토분 관련 기준을 제도화하고 토석 배출 가이드 라인 마련
건설정책국	24. 도로 및 철도 공사 설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시장 단가가 시장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시장단가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장단가 개선방안('22.11)*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주요공종 범위 확대 및 개정 주기 단축(2→1년), 물가보정기준 현실화(생산자물가지수→건설공사비지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p>25. 건설사업관리·감리 관련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기술인 자격 완화를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감리)는 시공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업무,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건설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다른 분야의 건설기술인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 * 건설기술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대학교 또는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산업기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자격이 부여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 분야 초급기술자의 자격 완하는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신규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감리)업계 유입도 중요하지만 건설현장 안전강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역량확보가 우선시 필요. * 민간합동개선추진단 건설·인프라분과위 규제 개선 검토결과('22.7.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자격 완화에 대하여 외부전문위원들 수용 곤란 의견제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26.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불공정 관행·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및 연계 확대를 담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대책」('23.5.11) 발표
건설정책국	27.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과 같이 종합과 전문의 건설업역별 특성에 따른 시공체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시장 개방 관련 업계의견 수렴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시장 개방 이후 양 업계 실적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3~12)
건설정책국	2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미작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23.1.2~'23.1.31 - (조사방법) 각 시도별 점검 및 단속 <p>* 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p>
건설정책국	29.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증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증기한 연장을 요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공문 시행 완료('23.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30. 공정건설지원센터(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 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조직·인력 보강을 보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을 신설('22.12),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23.1)하여 운영 - 불법행위 신고·처리뿐 아니라 현장 점검, 교육 등의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
건설정책국	31. 하자,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 지표를 개편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능력평가제도 평가항목의 가중치, 신인도평가액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22.7~'23.2)하였으며, - 연구 결과에 대해 관련 업계 등 대상으로 공청회(5.25)를 개최하였으며, 건설현장의 하자관리 능력 등이 시공능력 평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개선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하반기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정책국	32. 종합-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후 종합건설사 위주 수주 격차 확대 등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시장 개방 관련업계 의견 수렴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시장 개방 이후 양 업계 실적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3.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p>33.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준수가 미흡하고, 규격 외 장비에 대해 3t 미만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조종 중이며, 이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더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타워크레인에 실제 자격 기준을 갖춘 조종사가 배치되도록 안내 및 지도('22.11~'23.6)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현장 조사 등
건설정책국	<p>34. 건설산업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산업재해 전문인력 확보 등 건설산업 재해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21.12~)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확대('22.8) ○ 건설산업 재해감소를 위해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 중('23.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로드맵 마련('23.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p>35. 공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개발형사업은 예비타당성 제도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금액 기준 완화방안 마련('22.8.31) - 기재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시행('23.1.1) <p>*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2천억원 이상, 재정·공공 부담금 5백억원 이상 → 1천억원 이상</p>
건설정책국	<p>36. 부동산 PF대출 문제가 현실화되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므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융지원, 부동산 규제정상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 <p>* < 그간 발표한 주요 대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채안펀드, CP매입 등 50조원+a 유동성 지원, HUG PF 보증규모 확대 등(10.23), 예대율·LCR 규제 완화(10.27), 5대 금융지주 95조원 지원(11.3), PF-ABCP 매입(11.11) - (실물) HUG PF대출 보증대상 요건완화(10.23),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규제지역 해제(10.27), 규제지역 해제,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11.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37.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한 지역이나 통학구역 내 학교 등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및 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중 ('22.12~'23.9)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제도개선안 마련, 고시 개정 등 추진('23.下)
건설정책국	38.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품질 검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와 민간품질 시험에 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를 해소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검사대행기관 적정성 전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 증액에 따라 품질검사대행기관 적정성평가 용역 계약체결('23.3) * 전체 190개 기관 중 용역(5억 원,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147개 기관, 지방청 점검을 통해 43개 기관 시행 예정 ○ 지방국토관리청 품질검사 인력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시험인력(시험보조원) 채용 (원주국토청, '23.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및 건기연에서 품질검사대행기관 적정성평가 지속 추진 (~'23.12.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설정책국	39. 공동주택 등 건축물 콘크리트 양생 시 IOT,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강도와 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 기획과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 기획을 위해 과기부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23.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과제 수요조사 시행 시 수요 제출 등 적극 협의('24.1월~)
건설정책국	40.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를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험 의무화 등을 포함한 건설안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21.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별도 추진 방안도 검토

□ 교통물류실 (80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 지난해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도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인증협회에 자료제출자를 색출 지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의원실 보고('22.10.19) - 지난해 의원님 지적에 따라 튜닝부품 인증제 관리현황에 대해 조사('21.11~'22.3)를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인증기관 업무규정 개정('22.5) 등을 통해 개선 추진 <p>* ①튜닝부품 인증표시 개선(스티커 → 각인+스티커), ②튜닝협회(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인증·관리 강화, ③인증표시 분실 시 제조사의 인증표시 재발행 폐지하고 협회에서 재발행(비용 없음)</p>
교통물류실	2. 친환경차의 정비, 점검, 단속, 검사,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전문정비업 등록시 등록기준 완화('22.1)를 통해 정비시장 인력 확대 ○ 친환경차 정비기술 제고를 위해 정비 인력 정기교육 도입(자동차관리법 개정, '22.12 발의, '23.6 소위상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인력 교육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비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3.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 운행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자동차의 제작-운행 전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보고('22.10) - 자율주행 Lv4 안전기준 대응 및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준 개발 -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신차안전도평가 대상 중 전기차 등 첨단차 지속 확대 - 내연차 중심 정비·검사체계를 신기술 적용 첨단차에 맞게 전환
교통물류실	4. 결함차량 판매에 대한 정기조사,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차량 판매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조사 및 필요시 수시조사* 진행 중 <p>* KATRI에 결함 차량 판매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지시('22.10.25) 및 조사 진행 중</p>
교통물류실	5.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가 곤란한 문제, 전기차 정비소와 관련된 규정·자격이 없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차 무게를 고려한 기계식주차장 무게기준 상향 방안 마련 <p>* 기계식주차장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23.5월 ~ '23.12월)</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차량 무게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차량 무게기준 상향 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6. 전기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 대상 확대*, 화재발생시 전수 현장조사 실시('23.~),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차 안전 강화 추진 <p>* 전기차 '22년 8차종에서 '23년 15차종 실시 계획 수립('23.1.)</p> <p>** 국내 판매·운행중인 전기차에 대하여 무상 특별안전점검 실시('23.7)</p>
교통물류실	7. 전기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차량마다 배터리 위치가 달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차량별 구조 및 배터리 위치 등 관련자료 지속 제공중(분기별 업데이트)이며, 소방대원 대상으로 전기차 안전구조 세미나도 개최('23.6)
교통물류실	8.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적합한지 여부 등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주차장 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화재 방지 기준 마련 <p>* 주차장 구조안전기준 제도개선 연구용역('23.5월~'23.12월)</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충전시설 적정 위치 등 관련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9. 손해보험사의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으로 인해 자동차 정비업체의 피해가 크므로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에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차량 수리 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고 손해사정내역서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검토 완료 <p>* '22.12.9,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p>
교통물류실	10. 자동차 옵션 구독제와 관련하여 법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규제 공백·소비자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공백, 안전기준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제도 하에서 제작사는 모든 옵션 사양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작·판매 가능(자동차관리법) - 구독서비스 활성화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이버보안 및 SW 업데이트 관련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중 <p>*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2.12.29, 정동만 의원 발의)</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지속 협의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2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1. OTA 서비스 활성화, 사이버보안 등과 관련한 법·제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진행 중 ('22.12월 개정 발의) ○ 자동차 제작자의 정비업소 외 OTA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법제처 심사중 '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3.下.)
교통물류실	12. 테슬라 등 첨단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한 검사방법을 검토했으나 프로그램 변경 등의 한계가 있어, 대안으로 차량 내 정비 커넥터를 활용한 검사방법을 마련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치진단검사 테스트 장비 개발 (~'23.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3.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운행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자동차의 제작-운행 전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보고('22.10) - 자율주행 Lv4 안전기준 대응 및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준 개발 -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신차안전도평가 대상 중 전기차 등 첨단차 지속 확대 - 내연차 중심 정비·검사체계를 신기술 적용 첨단차에 맞게 전환
교통물류실	14. 리콜과 관련하여 불만 내지는 문제점을 정확 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와 제작사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리콜 조치 시 신속하게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안 공포('23.5) * 부품 수급계획 및 전용작업 공간 확보 계획을 시정조치 계획에 포함 등 ○ 자동차 제작사에서 결함조사 착수 여부 및 리콜 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결함 위험 평가체계 구축('22.11.30), 리콜 가이드라인 보완('22.12.21) 및 자동차 리콜('20.1~'22.9) 사례집 발간 배포('23.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5. 응급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재활시설이므로, * 자배법 제31조 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재활시설을 설치 ○ 응급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실 운영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재활의료기관(45곳) 중 응급실 운영사례가 없고, 근처 양평병원(1.5km)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을 기 운영중인 점도 고려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군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간 응급실 설치 이견조율을 위한 협의(지속)
교통물류실	16. 화주와 화물차주를 중개하는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주선수료상한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선수료 상한제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 신중 검토 필요 ○ 화물법 개정안(관련법안 발의, '23.2)을 통해 다단계 거래 및 차주의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화물위탁증에 화주 운임·거래단계 이력을 명시토록 하는 등 차주가 적정 운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17. 주선사업자가 화주와 화물차주를 중개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내지는 표준약관 방식을 이용하여 시장 상황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23.2)되었으며 표준약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교통소위 통과('23.5.24)
교통물류실	18.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현실적 여건으로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EU, 미국의 전자식운행 기록장치(ELD) 운영 실태, 활용 등 해외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규정, 졸음운전 예방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 유럽과 미국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ELD) 활용하여 연속운전시간 단속 및 점검 수시 시행 (유럽: 4시간30분, 미국: 8시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시간 준수방안 도입 검토
교통물류실	19. 심야시간 탄력호출 제도 도입에 따른 할증 호출료 배분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 탄력호출료의 대부분이 운수종사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 간 협의·시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0. 심야택시 대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대책이 상이하여 혼선이 생기고 있으므로 조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나투스 등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시간대 변경에 대해 플랫폼중개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완료
교통물류실	21. 외국인 관광객의 렌트카 이용 시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률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카드 디파짓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 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는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임에도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의할 예정, 다만 경찰청의 법적, 행정적 선결 조치 필요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디파짓을 도입하여 외국인 과태료를 대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u>경찰청장으로부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야</u> 하며, 차량반납시 과태료 실시간 조회 시스템 등이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등 협조 요청 시 지자체·업계 의견 제공, 대안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 모색 * 반납시 과태료 실시간 조회(경찰청) 및 미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제한(법무부)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2.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 검토를 위한 공정위 실무협의 실시 완료('23.2월)
교통물류실	23.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위법 여부와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 검토를 위한 공정위 실무협의 실시 완료('23.2월)
교통물류실	24. 코로나 이후 노선버스의 경우 매출 회복이 미흡한 현황이므로 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류세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버스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재정고속도로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고 타 운송업계(화물, 전세버스 등)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추가 감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통행료 감면금액 증가('19년 3,974억 → '22년 4,260억), 건설투자비 회수율 저조('16년 30.9% → '22년 32.3%) ○ 노선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는 택시, 화물 등 타 사업용 자동차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유가보조금이 '01.6월 이후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차액을 지급 중이고, 경유 자동차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23.8.31까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37% 인하 중(기재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5.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반영을 위한 기재부 협의 결과 전액 미반영 - 운영중인 도시철도 역사의 이동편의 시설 추가 설치는 지자체 부담 원칙
교통물류실	26. 청소년에 대한 전동킥보드 대여과정에서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법령을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 - 법률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사업 등록, 면허확인 의무화 등에 관한 조항뿐만 아니라 운전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이동수단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처분조항(등록취소)이 포함 * 법사위 계류중('23.3), 부처간 이견 조율 후 재상정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제정 후 개인이동수단 대여 시 대여업체의 면허의무 확인체계 구축
교통물류실	27.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제도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주차장 구조안전기준 제도개선 연구용역('23.5월 ~ '23.1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28.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관련 상시 및 연 2회 집중단속 중
교통물류실	29.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밴 택시인 벤티와 관련하여 카니발은 LPG 모델이 없어 LPG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행 도중 시동 꺼짐, 시동 시 부조 발생, 변속 충격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	<p>< 조치 중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개조 관련 튜닝 현황, 안전 관련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튜닝 업무 매뉴얼 개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개조 관련 튜닝 현황, 안전 관련 문제 여부 등 조사 (~'23.9) ○ 튜닝 업무 매뉴얼 개정 추진('23.10)
교통물류실	30.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단기 근로자 허용과 리스 도입 대책은 택시발전법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택시기사들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택시 리스제 타당성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논의 실시('22.10~'23.1)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보류('22.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p>31.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중 택시기사의 고객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개선, 승객 편의 제고, 데이터 제출 등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논의 중 * 진성준 의원안('22.2 발의) 등 4건 ** 3차례 교통소의 논의(3.14, 4.11, 4.2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법안 심사 대응
교통물류실	<p>32.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수수료 납부 구조로 인해 기사들과 카카오T의 매출이 부풀려져 기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거래 구조 단순화 등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가맹택시 외관 통일, 가맹기사 교육 등을 위해 사적(私的)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 추후 「가맹사업법」을 소관하는 공정위 등 유관부처에서 관련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조하고 필요시 플랫폼 가맹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적극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플랫폼, 택시업계 등 논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33. 카카오모빌리티의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보상 약관 내지는 매뉴얼 마련과 피해보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 화재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보상 절차 마련을 위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협의 실시
교통물류실	34.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야간과 일반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 퇴근 이후 시간대, 퇴근 이전 시간대 등에 대해 서비스 범위를 구분하여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진모빌리티 플랫폼가맹사업 등록, 코나투스 택시 합승 호출서비스 인가, 티머니 호출료 시간대별 변경 등 사업 계획서 변경 완료
교통물류실	35.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택시조합 내지는 택시운송조합이 51% 이상을 지분을 소유하고, 네이버·티맵 등의 기업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티머니) 등록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36.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온라인 대리등록 서비스 추진 (21년 12월 ~)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대리등록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23.12) <p>* 모든 서식 및 첨부서류 전자서식화, 자동차 등록증 등 발급서류 모바일 전환, 자동차 일괄 등록신청 서비스 제공 등</p>
교통물류실	37.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합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므로 조치를 취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 점검('22.1.~12.) <p>* 4개社 936개 터미널 중 135개 터미널 점검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업 등록기준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공고('22.8.) <p>* 생활물류법상 권장사항이나, 택배사업자 등록기준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사-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 점검('22.9~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 지속 점검('23.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38. PM-자전거도로의 조속한 확충 및 효과적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
교통물류실	39. 업계 민원 해소를 위해 조속히 공 허가대수(T/E)를 총당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허가대수(T/E) 총당 관련 화물차 수급분석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급기준 심의위원회('23.3) 개최 - 지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영조건부 총당 등 논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교통물류실	40.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최저보유 차고면적을 1/2 이상 경감하도록 조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관청(시·군·구청)과의 차고지 적극 경감 협의방안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의 경감실적 등을 취합하여 관할관청에서의 차고지 기준 경감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41. 화주·운수사·차주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책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 중 (관련 법안 발의, '23.2월) - 기존과 같이 시멘트·컨테이너에 대하여 차주가 지급받는 운임을 보장하여 차주 보호 -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운임제 위반 시 과도하게 부과하였던 과태료 조항을 완화하는 등 제도 합리화
교통물류실	42. 자동차 녹·부식문제, 자동차 안전하자위원회의 교환·환불 판정이 10건에 불과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피해보상을 보다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확대 및 도입('22.12~'23.10), 법제연구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개선(안) 마련('23.12)
교통물류실	43. 친환경차 정비교육을 제도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 정비기술 제고를 위해 정비인력 정기교육 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 '22.12 발의, '23.6 소위상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관리법 개정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44. 양평 국립교통재활 병원에 대해 적극적 으로 관리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현장점검('23.1, 국토부 2차관), 병원 운영위원회('23.2,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을 통해 병원 운영 전반(진료 현황, 결산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 ○ 향후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조직, 인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음
교통물류실	45.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공유킥보드 업체가 환불 없이 철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에는 대여업체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 및 휴업을 한 경우의 자격정지 조항뿐만 아니라 경중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포함 * 법사위 계류중('23.3), 부처간 이견 조율 후 재상정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제정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46. 공공시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기능을 개발 및 적용하고, 민간에 확산시킬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화재 방지 기준 마련 * 주차장 구조안전기준 제도개선 연구용역 ('23.5월~'23.12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적정 위치 등 관련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교통물류실	47. LPG, CNG를 사용하는 택시·버스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적용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CNG 가격의 동향 모니터링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 택시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전액 환급이 되면, 가격도 '21.12월 대비 91%수준으로 하락 안정세이므로 LPG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은 곤란한 상황 * (LPG '21.12월 1,087원/ℓ '23.3월 991원/ℓ - (CNG) 가격이 '21년 12월 대비 37% 상승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 부담을 완화할 필요 * (CNG) '21.12월 1,106원→ '23.3월 1,519원 ○ CNG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등 정책연구 예산 확보 협의 완료('23.4) ○ CNG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급 ('23.7.11~'23.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단가)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원/m³)-기준가격(1,330원/m³)}의 50%, 상한액 183.21원/m³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p>48. 자동차 보험 과잉 한방진료를 막기 위한 수가기준 구체화, 상해 구분표 개선,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도입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수가기준 개선 관련, 보험계 및 한의계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내에 한방전문 분과위를 구성('23.1)하여 지속 협의중 ○ 상해구분표 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를 실시, 상해구분표 개정(안)을 마련,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최종 의견조회 실시완료('23.3.20~3.30) ○ 경상환자(대인2)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도입은 자동차손해보험 표준약관(금융 감독원 소관)을 개정·시행('23.1.1)하여 완료되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수가기준 개선을 위해 한의계, 손보 업계 등과 지속 협의 ○ 상해구분표 개정을 위한 자배법시행령 별표1 개정 추진
교통물류실	<p>49. 저상버스의 보급 및 실질적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및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3.1.) <p>* '22년 2,269대 986억원 → '23년 4,299대 1,895억</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50.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관리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개정(’22.11.15)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점검자 준수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교통물류실	51.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및 수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모니터링, 정부합동점검(연2회, ’23.6, ’23.11 계획) 및 역량평가를 통해 민간 검사소 부실·부정검사 점검 ○ 검사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한 검사주기 완화대책 마련(’23.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중 (법제처 심사, ’23.7~)
교통물류실	52. 친환경 전기·수소 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안전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및 연구용역 추진(’23.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버스의 투과량 검사와 배기 배출 농도 검사방법 개발 및 전기차 안전운행 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53.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BMW 화재사건에 대하여 제작사는 책임 지지 않고 리콜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타2 엔진 및 BMW 화재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및 BMW 제작사에서 리콜을 기실시('17)하였고, 시정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 현재는 결함 은폐, 축소 및 능력 리콜 관련 형사사건 소송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대응 중
교통물류실	54.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는데 유효기관의 경과로 반납에 갈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고, 신규등록 신청일까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 임시운행허가증을 도입하여 현 임시운행허가증 폐지하는 방안 마련('23.8)
교통물류실	55. 자동차 신규등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폐지 또는 행정사·변호사 자격증으로 대리인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변호사가 신규등록 대리신청시 해당 자격증으로 신분확인 가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p>56. 운행제한단속원들로 하여금 합법적 단속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따라 저조한 단속실적, 노조와 협의 부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운행제한단속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진행 중 - 다만, 단속 권한이 '22년 최초 신설되어 시행기간이 짧았음을 감안할 필요 ○ 한편, 단속원의 업무증가에 대한 입장은 노조마다 상이하며 이에 찬성하는 노조도 존재함을 감안할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 지도단속 시, 현장 교육 실시 (기관별 연 1~2회)
교통물류실	<p>57. 국토교통부가 환적 화물을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고시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환적 컨테이너 특성상 수출입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정은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 대법원판결에 의거 환적화물을 '20년도 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적용 취소 - 이후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하고 '22.7.1부터 환적화물을 연도와 무관하게 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58. 장애인 콜택시 증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운영비 일부 보조 예산 최초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보조) '22년 431대 94억 → '23년 455대 101억 ** (운영보조) '23.7월부터 238억 교부 예정 ○ 지자체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도록 광역교통복지협의회('23.2) 등을 통해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교통물류실	59. 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배달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공단이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 제26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검토('23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이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특고직 배달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23년 내)
교통물류실	60. 합리적인 공임비 가격 책정으로 정비서비스를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업체가 받는 시간당 공임이 인상되도록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3차례 개최, '23년 시간당 공임 2.4% 인상에 대한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의 합의 도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임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지속 개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61.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 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이 아닌 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영업손실보상 규모 등을 검토중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여객시설 개선연구('22.9~'23.6, 충북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
교통물류실	62.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진료부를 설치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중장기 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중증의 아급성기* 다발성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문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재활병원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 등) 예방 등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한 한의 진료과 설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급성기(수술) 이후 회복 및 초기재활단계 ** (설립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제1항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진료부 설치 필요성을 중장기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63. 렌터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터카사업관련 점검 실시('22.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사항: 임차인의 운전자격확인이행 여부(효력여부포함), 미성년자 대여 이력 등 * 17개 시·도 및 관련 연합회·업체(1,179개) ○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규정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교통물류실	64. 전기차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정한 전기차 배터리 가격 산정 및 리스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참여 기회를 넓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배터리구독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중소기업에서 서비스 시행 중에 있음 * 전기차 배터리 가격산정, 리스료 산정기준 마련은 해당사항 없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65.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 - 법률안에는 구조와 성능에 대한 안전요건,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 <p>* 법사위 계류중('23.3), 부처간 이견 조율 후 재상정 예정</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구조 및 성능에 대한 안전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
교통물류실	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택시 귀로영업 시 사업구역 위반으로 신고된 기사의 50% 이상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호출에 따른 귀로영업 규제 완화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3.下)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67.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국민의 이동편의, 비용부담 및 업계의 부담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수단별 특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필요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강원도는 '23.1월, 서울·울산은 '23.8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하였고,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하반기 이후 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
교통물류실	68.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상이한 증차 규정을 정비하여 하나된 기준을 적용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운송사업은 화물차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중
교통물류실	69. 잘못 등록된 화물차량을 과거의 이력을 알지 못하고 구입한 선의의 양수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증차 등으로 잘못 등록된 화물차량은 시장 내 증차되서는 안될 차량이 증차된 것으로 수급조절 취지를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의 양수자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사유의 승계를 제한하면 양수자에게 감차처분을 할 수 없어 불법증차 차량을 시장 내 존치시키는 부당한 결과 초래 - 또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양도양수를 악용할 우려 - 선의의 양수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감안할 필요(2017헌바39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70. 불법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입제 피해 신고센터 접수건 중 불법증차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등을 병행 중(~'23.3) * 불법증차 확인건에 대하여 지자체 통보('23.4)
교통물류실	71. 대폐차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영업용 화물차 번호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일반차량과 같이 양도, 양수, 이전, 말소, 변경토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폐차 업무 이관) 대폐차 업무 이관시, 해당 기관의 인력 확보, 지역별 민원 접수를 위한 사무소 확보 여부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나 적정 기관* 확보 애로 * 지자체는 담당 인력 총원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폐차 업무 이·수관이 곤란하다는 입장 -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필요 시 화물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대폐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추진 ○ (전국단위 통합) 영업용 화물차는 화물 운송허가를 득한 후 운영을 해야하므로, 불법증차 등을 방지*하고 철저한 허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 필요 * 대폐차 등 변경허가 내역 관리 및 차량 등록 등을 지자체가 수행하므로 불법증차 적발에 용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72. 물류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해 제도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23.2월) *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활성화 및 파급효과 분석('22.4월 ~ 11월, KAIA)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신기술 관련 법령·지침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면책, 발주자 보상, 심사체계 개편 등 법제도 정비
교통물류실	73. 주차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23.1.12) - 일반 국민과 주차장업체에게 카카오 독과점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정위와도 협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74. 택배화물차 톤급 확대를 신중히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차 톤급 확대는 경제 규제혁신 TF 민간위원이 개선과제를 발굴·발표 - 업계가 우려하는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택배사업자가 직영하거나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진 중 *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 대폐차 허용 규정은 개정 완료('23.3) - 택배사업자가 직영하는 경우 톤급확대 허용은 화물차 수급조절을 위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논의('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교통물류실	75. 이륜자동차의 저조한 보험 가입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무보험 이륜차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보험 가입관리 강화를 위해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직권말소 등 실시('23.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76.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경상환자 진료기록 열람시점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경상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의사·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에서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후,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기록 열람시점 개선 필요성 중장기 검토
교통물류실	77.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의 부품보유 의무를 상시 공급의무로 제도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은 제작사에게 자동차 판매 중단 이후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 기마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78.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분쟁조정시스템 고도화 계획수립('23.4.) - 분쟁조정시스템 기능보완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조정 이력관리, 문자전송, 공문 자동생성 등 - 조정기일 단축*을 통한 분쟁조정 만족도 개선 * 조정안 작성기일 단축(전년대비 3.3일) 및 조정전 합의권고제도 활성화 등 - 분쟁조정신청 관련 대국민 홍보 * 상세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온라인 게시 등)
교통물류실	79.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확대 및 도입('22.12~'23.10), 법제연구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개선(안) 마련('23.12) -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다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 도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교통물류실	80.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인수하여 버스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모펀드의 예상 부작용을 방지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p>*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23.6.~'24.3.)</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 검토 추진

□ 항공정책실 (121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1. 대한항공(003490)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대표이사 조원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도피성 해외출장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출석 등 관련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
항공정책실	<p>2.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 간 분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인도 소송(3심) 인천공사 승소('22.12) 등에 따라 스카이72측과 후속사업자 간 영업양도 합의('23.2)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스카이72 → 후속사업자) 등 후속사업자의 영업운영을 위한 절차 진행(인천공사 지원)* * 다만, 인천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21.5) 손해배상소송은 계속 진행 ○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3.4월부터 후속사업자(클럽72)가 공식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3.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인도 소송(3심) 인천공사 승소('22.12) 등에 따라 스카이72측과 후속사업자 간 영업양도 합의('23.2)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스카이72 → 후속사업자) 등 후속사업자의 영업운영을 위한 절차 진행(인천공사 지원)* * 다만, 인천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21.5) 손해배상소송은 계속 진행 ○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3.4월부터 후속사업자(클럽72)가 공식 운영
항공정책실	4. 스카이72 사태와 관련하여 스카이72 정관의 해산조항 삭제, 주식매입 등을 고려할 때 사업연장을 위한 불법점유는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및 감사원 감사청구, 국세청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인도 소송(3심) 인천공사 승소('22.12) 등에 따라 스카이72측과 후속사업자 간 영업양도 합의('23.2)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스카이72 → 후속사업자) 등 후속사업자의 영업운영을 위한 절차 진행(인천공사 지원)* * 다만, 인천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21.5) 손해배상소송은 계속 진행 ○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3.4월부터 후속사업자(클럽72)가 공식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5.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남하하며 UAM 한강노선 이용 불가, 실증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25년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단계에서 UAM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한강 상공에 UAM 전용회랑 지정이 가능토록 관계기관과 협의되었으며 ('22.10.25, 공역위원회), 앞으로도 지속 협의해서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준비 계획
항공정책실	6. 신기술인 UAM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 적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담은 UAM법(상임위 통과, '23.6)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항공정책실	7. 공항 사업의 경우 공항을 건립해도 항공사가 취항을 할 여건이 안 되면 취항을 하지 않으므로 공항 사업과 관련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설계·공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항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음
항공정책실	8.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최적의 공법을 조속히 확정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매립식) 선정 및 조기개항을 위한 로드맵 마련 * '23.3.14(화) 중간보고회 및 언론브리핑 등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9. 가덕신공항 건설 공법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의를 조속히 마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법(매립식) 선정안에 대해 지자체 협의 완료 -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건설공법 선정안 발표 완료 <p>* '23.3.14(화) 중간보고회 및 언론브리핑 등 실시</p>
항공정책실	10.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하여 보상작업의 조기 추진을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완료('23.4.16)하였으며, 신속한 보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부산·경남)와 위·수탁 협약체결('23.6.29)
항공정책실	11. 가덕신공항의 여객 터미널·주차장 등 시설 규모를 향후 확장을 대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항 확장방안 마련 예정
항공정책실	12. 가덕도 공항 건립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 등 자재들 공급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에서 모래, 자갈 등 자재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환경부 업무협의를 예정
항공정책실	13.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2029년 개항을 위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	<p>< 조치실적 : 완료('23.3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 <p>* '23.3.14(화) 중간보고회 및 언론브리핑 등 실시</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길이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항 사타 용역 과정에서 활주로 등 충분한 규모의 민항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논의, 검토 중 * 국토부·국방부·대구·경북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실무협의체」 운영 중('21.5~, 3차례) ** 국토부, 대구·경북 추천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운영('22.9.30, Kick off)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
항공정책실	15.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복합되어 있는 특수성, 기부대양여라는 자원 조달방식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별법 마련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23.4.25. 공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시기('23.8.26.)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
항공정책실	16. 경상북도의 군공항과 민간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 의성군·군위군 등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민간공항 건설계획을 일치시키며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21.5~, 3차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논의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17. 울릉도 공항 개항을 계기로 원격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산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정보를 축적해야 할 시점이므로 원격관제로 전환하기 위한 R&D 용역 등 준비를 조속히 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관제) 원격관제 국산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중 * (과제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기간/예산) '23.3~ / 10개월 / 50백만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관제) 기초 연구를 통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안전성 등을 검증 후 원격 관제 적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항공정책실	<p>18. 2029년 개항 목표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과 관련하여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 전부 정부 재정으로 투입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년 개항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업체선정 추진중('23.3월 입찰공고) -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분담하여 건설 사업 시행 중(국가 :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 한국공항공사 :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설계 결과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협의 시 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비 분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9. 제주2공항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공개검증 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기본계획(안) 관련 지자체 의견 제출('23.7.31)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그간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 협조를 요청 -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남방큰돌고래·맹꽁이·숨골·소음 등에 대해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주도와 면밀히 검증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와 환경 관련 주요이슈 사항 중점 검토
항공정책실	20.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15) 당시 정석비행장도 입지 후보로 검토하였으나, 공역·기상·환경·접근성 등의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 * (문제점) 현 제주공항과의 공역 중첩 발생, 연 30일 이상 안개 등 저시정 상태로 공항 운영 곤란, 오름 절취, 접근교통 열악 등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1. 울산공항의 짧은 활주로 연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설개선, 노선 추가 신설 등 울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시설개선 관련 < 조치실적 : 추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로 연장은 물리적으로 곤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활주로 그루빙 추가 설치 등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공항의 결항률 감소 등 추가적인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위성서비스*(KASS) 상용화 시 울산공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검토 예정 <p>* GPS 오차를 1~1.6m 수준으로 줄여 정밀 위치정보 제공 가능</p> <input type="checkbox"/> 노선신설 관련 < 조치실적 :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공항 등 지방 국내노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23년 하계 국내선 운항 시각 조정·배분 기준 마련('23.1) - 슬롯을 국내노선과 연계하여 지방노선 운항 희망사에 우선 배분 완료('23.3) - 또한, 항공사 면담*을 통해 노선휴지 중이던 진에어의 울산-김포 운항재개 및 코로나 기간 폐지된 대한항공의 울산-제주 노선을 신설('23.3.26) <p>* 진에어('23.2.1), 대한항공(1.31), 하이에어(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던 하이에어는 정기노선 허가('23.1.16) 및 제주공항 슬롯 노선 연계 배분으로 울산~제주 노선 증편 추진('23.3, 주8회→주14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2. 코로나 19 이후 항공 산업 회복 추세에 따라 기체·승무원 교육 등 안전을 점검하고 슬롯 확보도 확인할 것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 관련 < 조치실적 : 완료 > ○ “국제선 운항증편 대비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전항공사에 배포('22.6)하고 종사자 훈련, 항공기 점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 중 <input type="checkbox"/> 슬롯확보 관련 < 조치실적 : 완료 > ○ 항공사는 운항신청시 국내·외 공항의 슬롯확보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며, - 국내공항 신청건은 슬롯조정기관인 공항공사에 선 확인 후 인·허가 중
항공정책실	23.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ICAO 국제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ICAO 고도제한 전담반 회의(제30차)에 참석*하여 국제규정 개정에 대해 발의·논의하였음 * (時·所·參) '22.11.21(월) ~ 24(목), ICAO 본부, 담당자 < 향후 추진계획 > ○ 국제기준 개정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4. ICAO 파트II 상향 진출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 위상 및 그간 기여도 등을 고려, 국격에 맞는 이사국 파트 상향(III → II) 추진 필요 ○ 우리나라 항공 위상 강화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23.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정책관(주재), 내·외부 항공전문가(11명)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공동 지원 등 논의를 위한 외교부(국제법규과)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23.8.2) ○ 주ICAO대표부 소통강화 월간 정례회의('23.8.8), 항공위상 강화 순차 간담회 개최('23.8.9-11) 등을 통해 발전방안 논의 ○ ICAO패널 역량강화를 위한 패널 교체 선발 완료('23.8)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ICAO 대표부, 외교부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이사국 동향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한 단계별 구체적인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국 정수 증대 비준 시기 및 파트별 예상 배분 상황, 국가별 파트 상향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연구용역'과 '외부 전문가 간담회' 등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5. 대한항공(003490)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버스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임.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등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치하겠음
항공정책실	2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작업과 관련하여 해외 당국의 조속한 승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동향 파악 및 외교부·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교적 지원 실시 * 항공정책실장, 일본 경쟁당국 관방심의관 면담('22.12월), EC 경쟁총부국장 면담('23.3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U, 일본의 경쟁당국 심사동향 및 대한항공 시정방안 모니터링
항공정책실	27.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독점 노선 해소를 위한 운수권·슬롯의 외항사로의 이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우리나라 LCC가 취항가능한 노선의 경우 대체사로 섭외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 측과 적극 협의 * 대한항공의 시정방안에 대체사로 우리 LCC 포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우리 LCC가 성장하여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28.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으로 인한 운수권, 슬롯의 외국 항공사로의 이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나라 LCC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는 우리나라 LCC가 취항가능한 노선의 경우 대체사로 섭외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 측과 적극 협의 * 대한항공의 시정방안에 대체사로 우리 LCC 포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우리 LCC가 성장하여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항공정책실	29.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관련하여 독과점으로 인해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2월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였고, - 항공사 통합계획 PMI('21.6)에 과도한 운임인상 방지 방안 등이 포함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30.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관련하여 무급 휴직 비율이 높고, 채권 금리가 인상되는 등 아시아나의 부실이 대한항공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기업결합을 통해 아시아나의 재무위기가 해소되고 대한항공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 실시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U, 일본의 경쟁당국 심사동향 및 대한항공 시정방안 모니터링
항공정책실	31.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
항공정책실	32. 항공산업발전조합 준비와 관련하여 비상 위기상황에 항공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조속히 기획재정부 설득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
항공정책실	33. 항공산업 발전조합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 시기를 조절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34. 항공산업 발전조합의 조합사업으로 제시되는 것들과 관련하여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경우 항공기 리스사는 최고 신용 등급의 은행 보증만 인정하여 조합의 보증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계약보증의 경우 조합원들의 수수료 30% 축소 예상이 되지만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장비 임대の場合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상호대립되어 장비 공유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보증, 계약보증, 장비임대 등 업계 부담 완화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합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겠음
항공정책실	<p>35.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특성 반영, 중복 분야 조정, 각 교육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부족한 부분 지원, 인증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선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방안 재검토 시 기관별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36.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항공업계와 노조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방안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개선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방안 재검토 시기관별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
항공정책실	37. 항공아카데미, 항공 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중단에 대해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항공아카데미 설립 관련</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방안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개선 - 한국 항공아카데미 설립 추진 중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 예정 <p><input type="checkbox"/>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관련</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
항공정책실	38. AOC 발급을 위한 비상탈출 시험 과정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예규)에 비상탈출시험 과정을 영상 촬영하도록 절차 마련('22.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39. 불법 드론 대응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인 대책·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 ('23.2월 ~) * 탐지·식별·무력화 통합시스템 구축 - 인천공항 불법드론 대응시스템(광학·열화상카메라) 고도화('23.1~10월, 11.3억) - 김포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23.5~12월, 17.9억) * RF스캐너 3식, ADS-B 1식, 통합운영시스템 1식 ○ 향후, 제주공항 시범운영 성능평가('23.8월)를 실시하고, 인천공항 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김포공항 탐지시스템 구축(~'23.12월)
항공정책실	40. 항공기 접촉 불량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연 유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제한, 슬롯배정 페널티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기 운항 지연 기준 변경* 및 지연원인 분류체계 세분화(대분류 6개→9개, 소분류 71개→108개) 시행 중('23.1.1) * 활주로 이·착륙 기준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초과→게이트 출·도착 기준 국내·국제 15분 초과로 강화관리 ○ 항공사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시 지연율을 반영하여 정시성 평가를 시행 중('13~)이며 정시성 평가 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1호)」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41. 국제선 정상화에 따라 여객터미널, 주기장, 탑승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 합동으로 여객터미널, 주기장 등 공항시설에 대해 계절별 점검, 집중안전점검 등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운영검사 등을 통해 공항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보완 등 조치하고 있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안전점검, 공항운영검사 등 지속 실시하여 공항운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항공정책실	42. 한국공항공사에 유사시 작업 중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 등 유사시 작업 중단할 수 있도록 낙뢰 대응요령(5km 이내 낙뢰 발생시 조업중단)을 마련·권고하고, 낙뢰 발생시 낙뢰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있으며, 낙뢰대응 요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한국공항공사-지상조업사 간 서비스협약에 반영('22.1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서비스협약(낙뢰시 조업중단 등)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영업승인 심사시 반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43. 지상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대책을 준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공간 설치(인천12, 여수1, 양양1), 제빙기 설치(인천, 김포), 야외 화장실 설치(인천), 장비정비공간 제공(광주, 청주, 사천, 군산 등) 및 방한용품 제공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조치 완료
항공정책실	44. 지상 조업에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페널티를 부과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국회 계류 중 ('21.9월, '23.3월 발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법 개정 적극 추진
항공정책실	45. 공항 지상조업자 낙뢰 피해와 관련하여 경보가 오면 자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낙뢰 대응요령(5km 이내 낙뢰 발생시 조업중단)을 마련하고, 한국공항공사-지상조업사 간 서비스 협약에 반영('22.11월), 낙뢰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있으며, 낙뢰대응 요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공항별 공항운영규정에 반영('23.8월)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46. 지상조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시정지 미준수, 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반복되는 부주의·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국회 계류 중 ('21.9월, '23.3월 발의)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법 개정 적극 추진
항공정책실	47.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예방·대처하기 위한 인력 및 첨단장비가 부족하므로 보완하여 안전을 도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내 첨단장비 추가 도입 등을 지속 검토하고, 배치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항운영자를 적극 지도 <p>* 모든 공항이 관련 기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충족 중</p>
항공정책실	48. 시설사용료 인상의 문제는 항공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면세품의 입국장 인도장 설치 문제는 입국장 면세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사용료) 고물가 추세 및 항공 수요 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시기 고려 ○ (입국장 인도장 설치) 부산항 시범운영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여부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수요 회복·물가 추이를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시기 등 결정 ○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의예정 <p>* 관세청 주관으로 면세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중</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49.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공항에서 적발된 승객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보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사례, 국내외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 이와 별도로 금지물품 홍보 강화를 통해 물품 소지 사전 예방 추진(연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승객에 대한 벌칙 신설의 필요성, 방법론 등 검토
항공정책실	50.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을 편성을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공항의 국제선 장거리 노선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항공사가 해당 노선 신청 시 적극 인·허가 예정
항공정책실	51. 조종인력 양성체계 방안 중 선선발제도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선선발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선선발제도 중단 - 항공사·훈련기관 간 자체적으로 협업·선발하는 자율 구조로 운영
항공정책실	52. 하늘드림재단의 폐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적 사항인 조종훈련생에 대한 재단의 대출 지원체계를 개편 - 대출 대상을 선선발 조종훈련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확대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지원체계 개편(~'23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53. 훈련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 면제에 대책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 시설사용료 ton당 징수 방식 (10톤→1톤 단위)으로 변경*하여 '24년부터 적용 예정 * 한국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사용료산정 등) 제5항 별표1 개정('23.5월)
항공정책실	54. 공항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주도적 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관련 해외사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 조사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의견 수렴·방안 검토를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주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단절 없는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항공정책실	55. 인천공항 물류단지, MRO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내국인, 외국인 간 차별이 없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에 동일하게 임대료 감면 시행('11.3) ○ (MRO클러스터) 인천공항공사가 MRO 클러스터를 조성 중('21~'25년)으로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56. 항공기상정보가 공개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에서 '21년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검토 시 적극협의하여 항공수요 회복 및 경영안정화 시점까지 인상 유보 * 그간 항공사는 항공기상정보를 항공기상청으로부터 구매(항공기상정보사용료) ** 항공기상청은 책임운영기관으로써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및 국내 사례를 검토하여 기상정보 개방·공유에 대해 항공기상청과 논의 예정
항공정책실	57. 국적 장거리 항공사는 KAL과 아시아나가 통합되면 1개 회사밖에 없는데 후발 주자에 대한 노선이나 슬롯 배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이후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해 공정위에서 신규진입항공사 등에게 슬롯·운수권 이전 시정조치 부과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신규진입항공사 등에게 슬롯·운수권을 재배분하는 등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58. 국토교통부가 슬롯·운수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롯운영 공정·투명성을 위해 본부로 업무 이관('19.3월) 및 규정 정비('2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IATA 국제슬롯가이드라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운항시각 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토대로 운항시각조정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배분중 ○ 운수권은 '국제항공권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분 중
항공정책실	59.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의 본사의 위치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항공정책실	60. 이스타항공과 항공정책실 간 각종 의혹 관련, 공정과 상식에 따라 항공정책실을 운영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자본 잠식에 따른 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 실시('22.10.4), 재무구조개선 이행 완료('23.6.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 논란 등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정책 운영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61.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송환대기자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가 불명확하여 송환대기자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개정 과정을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법무부에서 관계 법률(출입국관리법 등) 개정 추진 시 적극 협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률 개정 시 적극 지원
항공정책실	62. 외항사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외항사 조종사 154명* 단속完 * '22.12월 인천공항 집중단속(101명)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국적사 조종사의 약 15% 수준으로, 지역별로 분배하여 단속하겠음 (약 386명) * 인천 등 수도권공항 212명, 부산 및 경남지역 공항 97명, 제주공항 77명 예정
항공정책실	63. 최근 코로나 이후 항공업계의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난 코로나 기간의 항공사 퇴직자, 휴직·휴업 인원, 특히 에어서울의 청년 조종사 사연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포함해서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장관과 각 항공사 CEO간 항공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22.11.2)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개선 계획 마련 시행 지시 - 항공회복에 맞는 조종·정비인력 등 필수인력 확보와 교육훈련, 안전투자 확대 등 항공사별 자구노력 주문 * 에어서울 조종사(20명) 중 7명은 노선훈련 실시 중이며 '23.4월경 부기장 임명 예정, 나머지 12명도 순차적으로 훈련투입 예정(1명은 자진 퇴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64. 공항공사가 항행안전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수익은 국가가 징수하고 있으므로 형평상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투자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시설을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 및 이·착륙을 수행함으로써 공항공사가 이에 따른 착륙료 등 수익을 얻는 만큼, 정부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공항공사와 유지관리 비용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인 직간접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 중(1차 : '22.11, 2차 : '22.12, 3차 실무협의 : '23.1)
항공정책실	<p>65. 공항시설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시설 투자를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귀속이 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면 그 투자액이 전부 국가에 귀속이 되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면 투자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법을 일치시킬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총사업비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 -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부칙 제8조, 1999.1.26.)에 따른 인천공항의 토지와 시설은 공사에 현물출자 되었고 신규 시설 설치 시 공사로 귀속되도록 규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 투자분의 공사귀속 문제는 국유재산법 및 관계법령 규정, 국가자산 등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66. 한국공항공사에 국유 재산 사용료를 이중 부담시키는 문제,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수익을 국가가 징수하면서도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문제 등을 시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로시설을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 및 이·착륙을 수행함으로써 공항공사가 이에 따른 착륙료 등 수익을 얻는 만큼, 정부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공항공사와 유지관리 비용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중장기적인 직간접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 중(1차 : '22.11, 2차 : '22.12, 3차 실무협의를 : '23.1)
항공정책실	67. 기상악화 시 계류장 관리·운영 등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상악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낙뢰 대응요령(5km 이내 낙뢰 발생시 조업 중단)을 마련·권고하고, 낙뢰 발생시 낙뢰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있으며, 낙뢰대응 요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공항공사-지상조업사 간 서비스 협약에 반영('22.7월, 1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서비스협약(낙뢰시 조업중단 등)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영업승인 심사시 반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68.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공항 관련 국제 회의를 많이 유치하여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와 협력, 국제공항협의회 (ACI) 주관 국제행사의 부산 유치 지원 (항공실장 명의 유치지지 서한, '22.8) * ACI 주관 '2025 Airport Innovate' 부산 유치 (ACI 이태지역 이사회, '22.12.6)
항공정책실	69. 국립항공박물관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의 투명한 인사운영 방안*을 담은 「박물관 조직문화 혁신계획」 수립('22.5) * 직위공모제·순환보직제 시행, 직무분석 등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재편 등
항공정책실	70.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갑질신고 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여 진상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괴롭힘 사건 관련 우리부 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22.12) * 처분요구: 해임1·징계1·기관경고
항공정책실	7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공사 기부금 집행 등에 대한 법률자문 시행('22.11)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에 준하는 사전 확인절차 마련('23.3) *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내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신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72. 한국공항공사에서 올해 공항보안직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항 점검 및 특정감사 실시 (한국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계획, 친인척 관련자 명단, 전형별 서류 및 면접전형위원 명단 등 점검 - 전수조사 결과 공항보안직 채용에서 인사청탁 등의 부당 개입의 정황無
항공정책실	73. 국립항공박물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내괴롭힘 사건 관련 우리부 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요구: 해임1·징계1·기관경고 - 고충조사 신청 처리 부적절 사실과 관련, 처리절차 준수 및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 조치
항공정책실	74.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울산 취항노선 전체를 감편 추진하고 있는데, 감편 추진하고 있는 LCC 항공사 측의 애로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부산, 진에어 등 울산공항 취항 항공사(대한항공 1.31, 하이에어 2.2) 면담 실시 ○ (노선신설) 울산공항 등 지방 국내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23년 하계 국내선 운항시각 조정·배분 기준 마련('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롯을 국내노선과 연계하여 지방노선 운항 희망사에 우선 배분 완료('23.3) - 또한, 항공사 면담*을 통해 노선휴지 중 이던 진에어의 울산-김포 운항재개 및 코로나 기간 폐지된 대한항공의 울산-제주 노선을 신설('23.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에어('23.2.1), 대한항공(1.31), 하이에어(2.2) - 하이에어 울산~제주 정기노선 허가('23.1.16) 및 증편 추진('23.3, 주8회→주14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75.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일부 대학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문제와 국토교통부 퇴직자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협회 등에 재취업하고, 한국공항공사 퇴직자가 관련 대학,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정책은 스마트 공항운영, 드론제도, 국제협력, 항공산업, 공항건설, 항공정비, 운항, 공역관리 등 항공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8급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불가피한 상황임 - 다만, 항공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임용될 것으로 예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4급 이상 퇴직자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간 재취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재취업에 제약이 있음 - 산·학기관에서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항공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76. 국토교통부는 한국 공항공사가 항공보안 사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대응만 하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보안법」 제51조제1항제1호 처분과 관련된 ‘국가항공보안계획’을 개정('22.12.) 하여 공항운영자의 자체보안계획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 ('22.12월 완료) - 또한, 관계 법령에 입각한 엄정한 보안 사고조사,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처분, 기관(3개 지방항공청) 간 처분 기준 표준화 등을 위해 항공보안감독관 연간 감독활동 계획에 반영('23.3월 완료)
항공정책실	77.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에서의 투신·추락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신사고 예방문구 도로전광판(VMS) 표출, 투신 발생구간 특별 순찰 강화, CCTV 및 유고감지기 설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중 ○ 사장교 구간 갓길에 PE드럼을 설치하여 투신 의심차량 정차 방지 시행('22.11~)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신사고방지 추가대책(투신방지 시설물 등)을 사업자와 함께 적극 검토 중 * 사업자는 투신방지시설 설치 관련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한 풍동실험 시행예정(~'2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78. 현재 공항의 보안검색 요원들은 마약을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의무가 없으므로 법무부, 관세 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항공 보안검색은 테러예방을 위해 무기 등 위해물품 탐지에 목적 있어 검색요원에게 마약류 단속의무 부과는 곤란하다는 입장 * X-ray 등 보안검색 장비는 무기 등을 탐지 하는 장비로 마약류 탐지가 불가능하고, 보안 검색과 마약탐지를 검색요원이 실시하는 해외 사례도 확인된 바 없음
항공정책실	79. 항공안전기술원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필수인력 미확보에 따른 국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완료 - 기간제근로자 우선채용('22.10.4.) * 기관 안전관리자 1명 ** 드론인프라시설 가스·전기안전관리자 각 1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80. 제주 용담레포츠 공원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개정('11.4월)으로 지자체가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해서는 취득계획을 제출하거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하나 제주시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지속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였고 제주시는 납부 완료('22.12.27.)</p> <p>* (부과기간) '17.12.12.~'22.12.11.(5년) (부과금액) 금797,717,450원</p> <p>< 향후 추진계획 ></p> <p>○ 해당 시설(공원)은 공항소음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중</p> <p>- (무상귀속 검토) 제주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근거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23.3월)</p> <p>* 「국유재산법」 제16조(관리전환), 제54조(교환), 제55조(양여),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주민지원사업) 등</p> <p>※ 현행법상 지자체가 국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무상인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현실적인 한계 존재</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81. 항공산업발전조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설립을 노력하고,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개입할 것	<input type="checkbox"/> 항공산업발전조합 관련 < 조치실적 : 추진 중 >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임 <input type="checkbox"/> 기업결합심사 관련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동향 파악 및 외교부·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교적 지원 실시 * 항공정책실장, 일본 경쟁당국 관방심의관 면담('22.12월), EC 경쟁총부국장 면담('23.3월) < 향후 추진계획 > ○ 미국, EU, 일본의 경쟁당국 심사동향 및 대한항공 시정방안 모니터링
항공정책실	82.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한 항공운송 산업에 걸맞는 법제도 체계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정부 지원 강화, 외주를 내수로 돌리고 해외수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생산 경쟁력 제고, 정부 지원금 확대 등 조치를 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항공운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 항공 모빌리티 신산업 및 정비·제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 등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임 - 특히, 항공기 정비산업의 경우 해외 정비 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산업육성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83.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도 제한적으로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기시행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 필요 * ICAO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서 동일하게 운영 중 ○ 우리나라도 항공 선진 국가(미국, 유럽 등)와 동일하게 정비조직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며, 업체의 능력에 따라 업무종류와 범위에 따라 정비조직 인증서를 발행 중 * 업무종류: 항공기, 엔진, 장비품 등 업무범위: 제작사/모델/정비과업 등 ○ 따라서, 협력업체도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업무 범위 등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비조직인증이 가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84. 피폭량 안전기준을 연간 6mSv에서 5mSv로 강화하고, 4.7mSv 이상 승무원에 대한 노선 제한 및 근무조치 사항 추가 조치를 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량 안전기준을 연간 6mSv에서 5mSv로 안전기준을 강화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피폭량 안전 기준 수립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 하도록 공문 조치('23.3.15) * 그간 우리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이원화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을 통해 기준을 수립 하고, 우리부는 세부사항을 고시하여 항공사를 관리·감독)된 관리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도록 법령 개정 완료('22.6.10) ○ 누적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4.7mSv)에 대하여 스케줄 변경 등 피폭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항공사에 공문조치('23.3.1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p>85. 우주방사선에 관한 전문인력들의 피폭량 실측, 항공사별 프로그램 사용 조치 강제, 항공사 내 우주방사선 교육 강화 및 담당부서 인력충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적사에서는 평가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 세부사항을 원안위로 이관('23.6)된 이후에는 원안위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추가 프로그램이 제시될 예정 - 우리부에서는 항공기에 탑승, 실측을 시행하여 평가프로그램과 실측값의 오차 범위를 확인·검증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4차례 실측(인천-뉴욕, 시카고, 워싱턴 노선) ○ 항공사 내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교육의무 조항이 신설*되에 원안위에서 직접 교육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22.6.10) ○ 항공사에 우주방사선 전담인력 배정 등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철저 지시 ('23.3.15)
항공정책실	<p>86. 항공운항 중 위규사항에 대한 조사 시 회사나 대리인 등 관계인도 참석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실조사 시 법률대리인, 회사 관계자 등의 참석을 허용 중('23.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87. 감항성확인자 자격 부여 기종 수 제한 요건을 완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추진단 항공안전분과 회의 시 논의('22.7)되었으며 다기종 보유자의 결함 발생시 대처 능력 등을 종합검토 하여 정비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감항성확인자 자격부여 기종 수를 자체 관리토록 조치 완료
항공정책실	88. 항공기술기준 필수 검사항목(RII)과 관련하여 기능적 분리와 조직 구성상 분리가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기능의 분리로 문구를 수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검사관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 검토('20.11,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검사항목*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최종검사는 필수검사관을 동일 정비 조직내 운영할 경우, 정비품질보다 운항 정시성, 재정·인적요인 등 우선 고려하여 운항할 우려가 있어 동일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신중 검토 필요 * 필수검사항목(RII):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정비항목(엔진계통, 조종계통, 비상장비, 출입문, 착륙장치 등의 장착, 조정) ※ 항공사, 관계부서 협의('23.6.23.) 결과, 정비와 필수검사 기능을 동일 조직내 운영시, 정비품질 신뢰성 확보 보다는 운항 정시성과 재정 여건 등을 우선시 할 우려가 있어 기능적 분리와 조직 구성상 분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89. 항공사의 보고 기준이 항공기 지연 및 Ramp Return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 보고하도록 하는 항목을 지연시간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지연과 Ramp Return 항목을 통합해 1시간 이상 지연 시에만 보고하도록 일원화
항공정책실	90. 코로나로 인한 항공사가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감독관의 항공사 방문과 자료요청을 최소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시기에는 서류점검을 우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현장점검 실시 - 향후 코로나로 인한 휴업, 최소인원 근무 등 항공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효율적인 항공안전감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예정
항공정책실	91.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항공사 노동조합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공사에서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개선 중 * (인천공항 사례) 공항내 지상조업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32개소, 제빙기 10개소, 제세동기 6개소 등 편의시설 설치 등 개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92. 제주 제2공항 운영에 대해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공사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항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23.12, 잠정), 설계 착수('24.上~)
항공정책실	93.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제연륙교 착공 이후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지속적 요금인하 정책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23.2.28)에 따라 통행료 인하 추진 중 * 추진방안 확정(비상경제장관회의, '23.4.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협상,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예타 등 후속 절차 추진 중 * 인하 목표시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23.10.1, 인천대교 '25.12.31
항공정책실	94.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관제사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뮬레이터 운영인력 채용을 위한 '24년도 예산(2억원) 반영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예산안(2억원)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95. 공항주차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요금을 현실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의 주차장사용료는 혼잡 정도, 인근 유사시설 및 경쟁 교통수단의 요금 수준, 공항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운영자의 공항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 예정
항공정책실	96. 울진비행훈련원 사업 방식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비행훈련원 공모방식 개선, 원활한 비행훈련 수요 확보를 위한 민원 등 관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사업자 공모('23.下), 지역상생협의회('23.下)
항공정책실	97. LX 국산 구매 드론 미사용과 관련하여 LX 등 산하기관에 국산 장비 의무구매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등 실정을 고려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드론 제작산업 지속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수요처 역할이 절실하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산 드론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산업 실태조사 시행('23.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98. 새만금신공항은 중복 과잉 개발사업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 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수라갯벌 보존을 고려 하여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19.1) -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중 ○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22.6) 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업체 선정 추진 중('23.3월 입찰공고)으로, - 향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공항 건설·운영을 추진할 계획
항공정책실	99. 공항시설사용료 금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고, 공항시설사용료 세부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 공항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 (한국공사) 홈페이지 - 업무지원 - 사규 - 정관 및 사규(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검색) ** (인천공사) 고객참여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수익시설물 및 이용료 현황 검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0.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부과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 검토중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3.5.1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등 타 규정의 연체료 사례를 참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 예정
항공정책실	101.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항공사 부담을 현실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소음관리를 위해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공항소음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항공정책실	102. 인천공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공사의 조치권한을 확대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광고물 설치·부착·배포하는 행위자를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보유(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 <p>* 인천공항공사의 조치권한 확대(특사경 권한 부여)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법무부)으로 20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발의(박완수, '17.1)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됨</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3. 국내선 만성적자 현상, 군산-제주노선의 감편, 최소한의 운항 노선 유지 필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23년 하계 국내선 운항시각 조정·배분 기준 마련('23.1) - 슬롯을 국내노선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지방 노선(군산~제주 노선 포함) 운항 유지 조건부로 군산공항 운항을 희망 하는 항공사에 슬롯 우선배분 완료('23.3) * 이스타항공 항공기 도입 후 군산~제주 노선 취항 예정('23.8)
항공정책실	104. 지난 2년간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하여 양 공항공사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공항공사의 자체 수익증대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수요 회복과 양 공항공사 재무상황 개선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정부의 지원 여부 결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5.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정책연구 용역 추진 중('22.10월~'23.9월) * (용역명) 소형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 업역 정비 및 공익항공노선 도입방안 연구 / (기간) 계약일로부터 11개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보고회 개최('23.8.25)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상향(50→80석, 국내선 운항)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연내 개정 추진
항공정책실	106. 항공 보안사고에 대한 명확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사고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에 수립되어 있으며, - 공항공사·항공사 등의 항공보안 업무 수행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항공 보안계획'을 개정하여 항공보안법 제 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건인 '자체보안계획 未이행'에 대한 기준* 마련('22.12월) * 자체보안계획의 내용 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내지 제3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7. 항공사고 및 감염병 대응,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종에 항공의료센터를 설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천공항에는 인하대학교 공항의료센터 T1, T2 정상 운영 중 (T1 : 08:00-20:00, T2 : 08:30-18:00)이며, 24시간 비상 전파체계 운영을 통해 인하대병원 본원, 공항소방대와 협력하여 응급상황 대응 중 ○ 공항의료센터 운영, 인근 종합병원과 의료지원 협정* 체결을 통해 항공사고 24시간 즉각 대응체계 지속 운영 <p>* (협정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공항 인근 종합병원 25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관으로 영종지역 종합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추진 중으로, 병원 설립 시 공항의료센터 역할 이관 등 협력방안 적극 모색
항공정책실	108. 관제사 채용인원을 늘려 관제사의 확충에 힘쓸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사 37명을 '23.3.6일자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23년 하반기 결원 채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횟수를 연 2회로 늘려 신속한 결원 보충을 추진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09. 소음대책지원과 관련하여 착륙료, 소음 부담금이 징수된 공항에 우선 배분하고, 주민 지원사업비 지방비 분담 규정을 삭제하며, 주민 의료사업과 건강 증진사업을 포함시킬 필요	<p>< 조치실적 : 추진 중(중장기검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사업비를 공항별로 조성·사용 시 사업의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전국 단위로 조성 후 공항별 사업 물량과 시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분·사용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지방비 분담은 소음대책사업이 지자체 요구사업이므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일부 부담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재원으로 전국 공항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중장기 검토 필요
항공정책실	110. 피로·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형전세기 승무원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전세기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도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 * 항공안전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8조 ○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이 소형전세기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 여부 지속 점검 추진 * '22년 10월 완료, '23년 2회 점검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1. 중장기적으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인바운드를 활성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아웃바운드 수요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지방공항의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슬롯 인센티브 부여하고 환승·인바운드 유치 효과가 큰 노선을 신규 취항 시, 홍보비용 지원, 슬롯배분 등 신규 취항을 적극 지원
항공정책실	112. 항공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물류단지를 추가 확보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 추가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주변 및 인천공항 내 미개발 부지를 활용한 공항물류단지 개발을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후 물류단지 조성 등 추진('25~'27)
항공정책실	113. 국토교통부에서 박물관으로 전환채용된 직원이 채용비리·계약 쪼개기·성추행 등으로 해임되었는데, 관련 형사 고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규정 강화, 수의계약 비율 감축 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검토 후 박물관에서 수사의뢰('23.2) ○ '22.1월 비위사실 확인 후 징계 강화, 계약절차 개선 등을 담은 「박물관 조직문화 혁신계획」 수립('22.5) - 인사규정 시행세칙(징계양정기준) 개정('22.7), 계약업무 시행세칙 개정('22.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4. 청주공항 활주로 전면재포장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조기 시행하고, 활주로 연장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 활주로 시설개선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5월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 예정
항공정책실	115. 제주지방항공청 관제사 간 팀워크 균열, 협조·소통 미흡 및 갑질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소속 분리 등 보호조치 및 관제사간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구성원간 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 ('22.10월), 간담회 정례화 등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소속(課) 분리하여 전보 조치('21.9) - 갑질피해 신고 자문회의('21.11.2) - 관제탑·접근관제소에 '무기명소리함' 설치 ('21.11.17) -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외부강사 초빙, '21.12.6) - 관리자와의 간담회 정례화 ('21.10부터 분기별 정례 개최) - 본부 주관 관제사 소통 워크숍 개최 ('22.10.28) ○ 관제사 소통을 위한 관리자와의 간담회 정례화(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30, '23.1.11, '23.5.19, '23.5.29 ○ 향후 '23년 본부 주관 관제사 팀워빌딩 워크숍 추진 예정('23.9.7~8)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16.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과 관련하여 양 공항공사를 배제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합에 참여하고, 출자금에 관한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항공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조합 설립 등에 관하여 검토 중
항공정책실	117. 도심 항공모빌리티 UAM 상용화 대비 버티포트 등 인프라 핵심기술 표준수립 및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 상용화 실증*(그랜드챌린지) 및 연구개발 R&D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 기준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p>* 1단계 실증사업 착수('23.8월)</p>
항공정책실	118. 공항주변 호텔 및 골프장 개발 등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항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항공정책실	119. 조종사 기내 흡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종사자의 업무 중 기내흡연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20.12, 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한 바 있으며, 기내흡연 근절을 위해 조종실내 흡연 금지 종사자 전파교육 조치 등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항공정책실	120. 항공기 지연의 원인 중 항공기 접속 원인이 85%로서, 항공기 접속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항공기 지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운수권, 슬롯 배정 등 패널티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양 공사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기 운항 지연기준 변경* 및 지연원인 분류체계 세분화(대분류 6개→9개, 소분류 71개→108개) 시행 중('23.1.1) * 활주로 이·착륙 기준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초과→게이트 출·도착 기준 국내·국제 15분 초과로 강화관리 ○ 항공사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시 지연율을 반영하여 정시성 평가를 시행중('13~)이며 정시성 평가 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음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41호)」
항공정책실	121. 현재 흑산도·울릉도·백령도·제주도·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서지역으로서 조류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므로 조류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수립 시) 절차를 통해 조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등 검토 중 ○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항별로 공항 건설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조류 충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제28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별 추진단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조류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 도로국 (50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전문기술·경제성·비용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재부, '23.2.~) ○ 서울시, 경기도 등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23.1.31)·운영 중 <p>* 예타,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전문기술·경제성·비용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협의체도 지속 운영</p>
도로국	2.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는 민자복합휴게소 업체들이 지나친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책무를 이행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기간('20~'22) 명절 영업 제한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방역비 지원, 운영기간 연장(1~2년) 등 지원하였음 ○ '23년 신규 민자복합휴게소부터 최소 고정사용료를 매출액 연동 사용요율 적용으로 변경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경쟁 시 최고사용요율 투찰유인이 낮아지도록 평가방식 개선('22.12.29) <p>※ 기계약된 민자복합휴게소는 협약서 및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3. 민자고속도로 수요 예측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과정에서 민간이 제안한 교통수요를 민자도로센터(KOTI) 등이 면밀히 재검토('23.3~) * 교통수요는 민간이 예측하여 제안하고, KDI가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에서 민자도로센터(KOTI)가 지속 재검증 중
도로국	4.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에 대해 기발표된 대로(2019.12.04.) 사업자와 조기착공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조기착수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중('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논산 손실보상 등 시행 가능한 조기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 추진
도로국	5.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천안논산 민자도로 실시협약 55조에 따라 만일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고 기발표된 대로(2019.12.04.)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조기착수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중('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논산 손실보상 등 시행 가능한 조기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6.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의 상환주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인선 및 울산선 통행료에 대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노선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통합채산제* 취지, 타 노선 통행료 인상 등을 고려 시 추진 어려움 * 전국의 재정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아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 - 통합채산제를 폐지한다면, 노선별로 통행료를 산정함에 따라 적자 노선은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지역 간 통행료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경인선, 울산선 등 수익노선의 통행료 면제시 적자노선인 서울양양선(900원→10,870원), 동해선(900원→5,171원), 광주대구선(900원→7,415원) 등의 요금 상승
도로국	7. 판스프링, 포트홀, 싱크홀 등 도로의 위험요소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합동 도로안전추진단 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합동 단속,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부, 경찰청,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법령 운영, 유지관리·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시행중 ○ 개별 법률에 산재된 도로 관리 및 안전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고, 종합계획 수립,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중 * 도로의 관리 및 안전 개선에 관한 법·제도 마련 연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안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23.4~ , 15개월) ○ 도로 안전 관계기관 TF 운영('23.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8. 제2경춘국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無응찰로 유찰되어 입찰방식 변경*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당초) 기본설계기술제안 → (변경) 기타공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완료('23.2~12) 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할 예정
도로국	9.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6축, 평택-삼척 간 도로 중 영월-삼척 간 도로의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2.2월 발표)」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23.2,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23.5, 기재부) 및 착수('23.6~, KDI)
도로국	10. 경기 북부지역에 재정 고속도로·재정도로 건설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도로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23.2~4) ○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 추진('23.5~'25.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1. 국지도 60호선 사업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제초 노선변경) 화제초 구간의 노선 변경은 불가하며, 명언교차로 폐쇄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시공 예정 ○ (사업장 보상) 유산공단 구간 보상은 보상주체인 양산시가 편입 공장 소유자 등과 대체부지 중재 등 적극적으로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보상 주체인 양산시가 대체부지 중재 등 협의 중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부도 적극 협조 예정
도로국	12. 국도 7호선에 부산 방면 진출입로가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 계획('23~'27)에 반영
도로국	13. 국도 28호선 및 국도 34호선에 대한 불편 해결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34호선 입장-진천 사업의 선형 불량(제한속도 30km/h) 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협의 완료('23.1월) ○ 국도 28호선 삼국유사-우보 사업은 설계단계('23년 착수 예정)에 지역 불편 사항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p>* (사업계획) 2차로 개량 7.72km, 412억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p>14. 도로 공사 설계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단가가 시장 현실과 큰 격차가 있어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제 건설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 방안을 건설국과 함께 적극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장단가 개선방안('22.11)*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주요공종 범위 확대 및 개정 주기 단축(2→1년) 물가보정기준 현실화 (생산자물가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아울러, 기술형 입찰 중 유찰된 사업은 입찰방식을 변경하여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 *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
도로국	<p>15.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착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완료 ○ 감사원 감사('22.7~'22.11) 결과, 환경부 제도 개선(통보) 외 지적사항 없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이행방안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6. 문산-도리산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조사단*(전문가, NGO 등 13인)과 갈등예방협의체**(주민, 지자체, 軍 등 13인) 구성·운영 중('20.10~, 분기별1회) * 환경영향조사 신뢰성 확보 및 대책 마련 ** 발생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조사단, 갈등예방협의체 지속 운영 - 공동조사단 : 준공 후 3년까지 - 갈등예방협의체 : 준공 시까지
도로국	17.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의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완료('22.12), 총사업비 협의 요청('23.1,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착수('23.3~, KDI)
도로국	18.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2.2월 발표)」에 일반사업으로 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계획 - 예타 대상으로 선정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 - 예타 통과 시 타당성 평가, 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19. 도로나 교량에 파손을 발생시키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단속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해결을 위해 다차로 80km/h 이상 고속 주행 환경상 인지율 95% 이상의 단속 시스템 개발 시행* 중 * AI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 향상기술 개발사업('22.4~'26년) ○ 차량 단속장비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체계 도입 연구용역* 시행 * 운행제한 차량 단속장비 성능인증체계 수립 방안 연구('22.2~'23.3) ○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완료('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 주행 환경상 인지율 95% 이상의 단속 시스템 개발(~'26.12) ○ 성능인증기준 제정 및 성능인증시스템 구축 추진('2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p>20. 거가대교를 포함한 지자체 유료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3억원 확보('22.12) ○ 관련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지자체 민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23.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 및 협의체 통해 검토
도로국	<p>2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지능형교통협회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 감리, 성능 검증 기관을 분리하고 지자체별로 시스템 운영 실적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S협회 이외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 ITS협회 외 도로교통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TS 전문인력을 보유한 연구기관·공공기관 참여 가능 - 감리 : ITS사업 추진시 정보통신 감리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음 - 성능검증기관 : ITS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중 선택 가능 -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시 사업관리, 감리, 성능평가 등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지자체 사업설명회 실시 - 지자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설계·시공·감리·사업관리 등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관리 중 <p>* 의원실 설명('22.11.9)</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2.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기술표준안을 제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p>○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기술발전을 고려 지속적 개정 중</p> <p>- ITS 국가표준 제정 현황 (국토부고시)</p> <table border="1" data-bbox="767 658 1474 1440"> <thead> <tr> <th>기술표준</th> <th>고시번호 (고시일)</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td> <td>2021-1059 ('21.9.1.)</td> </tr> <tr> <td>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td> <td>2021-1060 ('21.9.1.)</td> </tr> <tr> <td>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III</td> <td>2023-20 ('23.1.6.)</td> </tr> <tr> <td>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td> <td>2016-208 ('16.4.15.)</td> </tr> <tr> <td>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td> <td>2013-251 ('13.4.11)</td> </tr> <tr> <td>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td> <td>2020-950 ('20.12.21.)</td> </tr> <tr> <td>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td> <td>2023-23 ('23.1.6.)</td> </tr> <tr> <td>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td> <td>2023-22 ('23.1.6.)</td> </tr> <tr> <td>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td> <td>2018-729 ('18.11.29.)</td> </tr> </tbody> </table> <p>* 의원실 설명('22.11.9)</p>	기술표준	고시번호 (고시일)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2021-1059 ('21.9.1.)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2021-1060 ('21.9.1.)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III	2023-20 ('23.1.6.)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2016-208 ('16.4.15.)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2013-251 ('13.4.11)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2020-950 ('20.12.21.)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2023-23 ('23.1.6.)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2023-22 ('23.1.6.)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2018-729 ('18.11.29.)
기술표준	고시번호 (고시일)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2021-1059 ('21.9.1.)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2021-1060 ('21.9.1.)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III	2023-20 ('23.1.6.)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2016-208 ('16.4.15.)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2013-251 ('13.4.11)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2020-950 ('20.12.21.)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2023-23 ('23.1.6.)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2023-22 ('23.1.6.)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2018-729 ('18.11.29.)																					
도로국	23.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 상황이 나쁜 경우에 대비한 고도화·효율화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p>○ 악천후 시 인식률 저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보완조치* 도입 중</p> <p>* (예) ①(성남시) AI 영상보정, 날씨에 따른 영상설정 자동변경 ②(화성시) 영상 2차분석을 통한 보정 ③(안성시) 딥러닝을 통한 보정</p> <p>** 의원실 설명('22.11.9)</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4.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은 서비스등급평가에서 5년 연속 F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방음벽,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대책(방음벽, 방음터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 동광주-광산 확장 실시설계 : '19.9~'23.7 - 공사 시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
도로국	25. 국도대체우회도로 문제로 인해 원주의 성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도로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23.2~4) ○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 추진 ('23.5~'25.10)
도로국	26. 고속도로 빗길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하여 배수성 포장 의무화 하는 방침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해 시험시공* ('21년) 후 공용성능 추적조사 중 (한국도로공사) * 시험시공 개요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참여업체) 한국아스팔트학회 주관으로 품질 기준을 통과한 3개 업체 선정 (시공위치) 호남고속도로 135.5~137.0k(양방향) [L=6.0km/1차로기준] <정읍~김제> (추적조사) 소음저감 경년변화, 현장투수능력, 미끄럼 저항성, 내구성</p> </div>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시험시공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임(한국도로공사) <p>⇒ 결과 및 추진계획을 모니터링 계획 (국토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27.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고속도로 등에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인, 경부, 수도권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계획 마련 * 경인('22.5~), 경부('23.2~) 예타 진행 중
도로국	28. 서원주역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적고 역사가 인구밀집지역과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연결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도로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23.2~4) ○ 서원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도 19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흥업-지정), 국지도 88호선 4차로 확장(원주 지정 간현-가곡)이 제출되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과정에서 검토
도로국	29. 맥쿼리가 민자도로를 인수하여 상당한 폭리를 취하는 문제, 서부내륙 고속도로 착공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 제기 우려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조기착수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중('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논산 손실보상 등 시행 가능한 조기착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p>30.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투자휴게소가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유로 고정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기간('20~'22) 명절 영업 제한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방역비 지원, 운영기간 연장(1~2년) 등 지원하였음 ○ '23년 신규 민자복합휴게소부터 최소 고정사용료를 매출액 연동 사용요율 적용으로 변경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경쟁 시 최고사용요율 투찰유인이 낮아지도록 평가방식 개선('22.12) ○ 기 계약된 민자복합휴게소의 경우 협약서 및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신중할 필요
도로국	<p>31.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점, 휴게소 음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기간('20~'22) 명절 영업 제한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방역비 지원, 운영기간 연장(1~2년) 등 지원하였음 ○ 음식값 인하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도공 주관 하에 휴게소 운영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p>* 휴게소 음식값 인하 및 품질개선 TF 운영 ('22.9.23~ / 4차 회의 완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p>32. 민자복합휴게소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 사용료를 내거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고정금액을 사용료로 내도록 되어있는 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므로 적정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기간('20~'22) 명절 영업 제한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방역비 지원, 운영기간 연장(1~2년) 등 지원하였음 ○ '23년 신규 민자복합휴게소부터 최소 고정사용료를 매출액 연동 사용요율 적용으로 변경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경쟁 시 최고사용요율 투찰유인이 낮아지도록 평가방식 개선('22.12.29) ※ 기계약된 민자복합휴게소는 협약서 및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
도로국	<p>33.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직원이 허위 자격증 발급받고 자격 수당 챙기는 등 기강이 해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 감독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건설기계 면허(6종) 수당(월3만원) 폐지로 재발 가능성 원천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더(5톤 미만) 등 5종 소형면허 수당은 기폐지('21.1) 하였으며, 지게차(3톤 미만) 소형면허 수당도 폐지('22.10) ○ 허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급 수당 전부(83명, 33백만원) 환수 - 수사관련자 전원(138명) 징계처분* * 정직 33명, 감봉 91명, 견책 14명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34.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도로 교통의 흐름을 관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및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
도로국	35. 공항 상주직원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 운영이 원칙으로 통행료 감면은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 - 공항 상주직원 감면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일반국민에게 부담을 전가 * 참고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발표('23.2.28)'에 따라 공항 상주직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도로국	36. 원주시 국도대체우회 도로 중 단절된 서부 구간(흥업-지정) 국도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추가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도로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23.2~4) ○ 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 추진('23.5~'25.1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37. 차도용 블록포장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용 블록포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2.12월)
도로국	38.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추가진입로 설치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도IC 진입로 추가 설치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본선에 갓길 가변차로를 운영토록 대책을 수립 완료
도로국	39.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대구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22.11~)
도로국	40. AI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불법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사업으로 「AI 데이터 중심의 화물차 운송 안전 향상기술 개발사업」 시행 중('22.4~'26년)
도로국	41. 김해~김양 고속도로 기점을 비음산터널(창원)까지 연장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밀양 구간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2.2월 발표)」에 중점사업으로 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연장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계획 수립시 간선망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42. 국도 14호선 장평~사등 구간을 조속히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어 타당성재조사 진행 중('21.1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재조사 추진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도로국	43.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건설공사 국비를 증액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3년 정부안 2,343백만원에서 7,343백만원으로 국회 증액(5,000백만원)되어 편성됨
도로국	44. 7단계 국도병목지점 개선 기본계획 포함을 적극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3~'27)에 반영
도로국	45.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여주)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2.2월 발표)」에 일반사업으로 반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계획 - 예타 대상으로 선정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46. 과천-서충주 민자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서충주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의왕-광주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완료('23.5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사가 과천-서충주 사업계획 보완중
도로국	47.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조속히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영동~진천간 고속도로 건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민간투자심의위를 통해 영동-오창 고속도로를 일부 보완한 후 민자사업으로 추진 결정('23.2) ○ 영동-오창 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의뢰('23.3)
도로국	48. 운전자 스스로 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물차에 중량 측정장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측정 장비 신뢰도 확보, 도입비용, 업계의견, 해외사례 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p>* 고중량 차량 자동운행허가 시스템 도입 연구용역('23.4~'25.12)</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23~'25) 결과에 따라 장래 도입 여부 결정 및 도로법령 개정 등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도로국	49. 도로공사 민간투자 휴게소 등 BOT 방식 으로 추진되는 공공 기관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대책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 민간투자휴게소의 경우 해당 사례는 없으나, 향후에도 사적 목적의 점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도로국	50.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교통량 분석 용역 등 감안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연장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계획 수립시 간선망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

□ 철도국 (101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 현실을 반영한 철도 소음기준 개선 검토 및 방음벽 설치·개량을 시행하는 등 철도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벽 설치기준 재정립 및 철도교통 환경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23.3) - 주거밀집지역 철도소음 대응방안 및 철도소음기준 개선방안 등 검토
철도국	2.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의 2027년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개 공구 중 턴키 2개 공구는 착공 완료 하였으며('22.9), - 나머지 6개 공구도 실시설계를 완료 ('22.12)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추진 중
철도국	3. GTX-B 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 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재정 구간의 총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22.7), 현재 전 공구 설계 진행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계획('24.上)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4.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인 용문-홍천 간 철도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진행 중('21.10~)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3.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도국	5. 부산-양산-울산 신규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23.5)
철도국	6. GTX-B 완공 시점에 대한 정확한 논의를 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참고)자료 배포 등을 통해 '24년 상반기 착공, '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임을 안내함
철도국	7. GTX-A 요금 관련하여 비혼잡시간 할인, 정기관 판매, 민자 노선의 공사비 점검 등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요금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환승할인 적용 관계기관(서울, 경기, 인천 등) 합의('23.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환승할인 등을 포함한 GTX-A 요금체계 개통 전 확정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8. GTX-A 및 GTX-C 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의 집중 점검 및 민자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상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및 GTX-C 노선 연장을 포함한 ‘GTX 통합 확충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타당성·경제성 등을 검토 중 - GTX-A·C 노선 연장 관련 사업추진 방향 공유를 위한 지자체 협의회 개최('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연장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원인자부담으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
철도국	9. 도시철도의 65세 이상 무임승차·장애인 할인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보전을 함에 따라 지역마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운영 주체가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운영과 관련된 무임수송 국비 지원은 곤란 - 요금 수준과 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실시 여부는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 필요 -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사에 철도 건설비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안전시설 보강,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해 지원 중('18년~'22년, 총 4,259억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0.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의 일방적 책임 부담을 완화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운영 주체가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운영과 관련된 무임수송 국비 지원은 곤란 - 요금 수준과 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실시 여부는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있으므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 필요 -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사에 철도 건설비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안전시설 보강, 노후차량 교체 등에 대해 지원 중('18년~'22년, 총 4,259억원)
철도국	11. 출퇴근 시간대 경인 철도, 경인선 등에 지나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연계 없이 추진 가능한 제2경인선 사업계획 재기획 추진('22.2~'23.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재기획안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타 신청 등 후속 조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2. 동해선 KTX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 확대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고속열차 동해선 운행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진행('23.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거쳐 '23.9월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예정
철도국	13.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관저 지하에 GTX-A 노선이 건설 중이므로 국방부와 협의하고, 안보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GTX-A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22.11)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GTX-A 노선 안전 등 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대심도 터널 공사 완료 시점('24.12)에 준공도면 등 협의
철도국	14. GTX-B 노선의 재정 구간 중 1공구~3공구 구간이 세 차례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찰된 1~3공구는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발주('22.11)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 '24년 상반기 착공, '30년 개통 목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5.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부산~양산~울산(웅상선) 등 광역 철도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23.5)
철도국	16.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과 벌점에 대해 취소소송 중에 있는데 벌점 부과와 관련한 법령 적용을 명확히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실시 -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후 벌점 최종 확정('22.11.29)
철도국	17. 부품결함,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철도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정비 민간컨설팅팀 구성 및 분기별 자문 추진 중 * 컨설팅팀 구성 및 수요조사('23.3.9) 1분기 철도차량 정비전문가 컨설팅 시행('23.3.30) 2분기 철도차량 정비전문가 컨설팅 시행('23.6.16) ○ 업무상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 안전감독관, 민간자문단 점검 및 현장 교육 실시('23.2~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23.8월,12월) 차량 정비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추진하여 정비 우수사례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및 정비 조직 등에 전파하고, 업무상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안전감독관, 민간자문단 점검 지속 실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p>18. 내구연한을 초과한 서울시 지하철의 교체가 필요하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독점으로 인해 납품을 지연한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쟁체제의 확립과 기술력·납기 준수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약제도를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항목 보완 방안을 지자체, 운영사 등과 협의('23.4.13) ○ 유관기관 및 관계자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차량 제작 능력 및 품질에 대한 평가강화 등 합리적인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권고('23.4.21)
철도국	<p>19.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독점에 따른 폐해가 있으므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차량입찰에 2개사가 참여하여 경쟁 중으로 발주기관(코레일)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토록 관리
철도국	<p>20.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 KTX에 차량제작사가 입찰을 불참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2016년에 발주한 차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 KTX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 계획 수립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발 KTX 개통('25) 예정일 2개월 전 차량 투입 등 열차운행계획 수립 예정(코레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21. 승강장 안전문을 확충하고 방호울타리를 신설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안전문) 251개 설치대상 역 중 214개 역은 설치 완료하였고, 미설치 37개 역은 시공·설계 진행 중으로 '24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 ○ (방호울타리) 일반철도 3,041km 중 방호울타리 3,020km 설치 완료 * 고속철도는 전구간(404.3km) 설치 완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장안전문) 미설치 37개 역 '24.12월까지 완료 예정 ○ (방호울타리) 일반철도 방호울타리 잔여구간 104km를 '23.5월까지 완료 예정
철도국	22. 철도 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는 사고가 발생한 노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한 내규*에 근거하여 사고 관련 기관사가 보직 이동을 원할 경우의 타 노선 또는 비운전업무로의 보직 이동이 가능 * 고충처리규정(한국철도공사), 노사협의회운영규정(서울교통공사) - 사고 발생 기관사의 심리진단과 치료를 위해 휴먼안전센터(철도공사), 휴먼마음건강센터(서울교통공사) 운영 중 ○ 사고 발생 기관사의 정신건강 치료 및 보직 관리 등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수시 점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23. 수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전선 KTX와 SRT 노선 추가·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운행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진행('23.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거쳐 '23.9월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예정
철도국	24. 차후 이루어질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 홍천 지역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중('21.10~) -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지역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분석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3.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p>25. 평택지제역 인근에 에스알의 차량기지를 건설하려 하는바, 평택시의 GTX-A 노선 유치 지원을 검토하고, 에스알 본사의 평택시 유치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 평택 연장을 포함한 'GTX 통합 확충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타당성·경제성 등을 검토 중 * '22.6~'23.12 / 교통연구원 등 / 12.6억원 ○ SR 본사 이전 타당성 등 검토 중(SR) * 평택 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23.6, 철도공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과 연계하여 본사 이전방안 검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연장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원인자부담으로 조기에 추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등 추진 ○ 본사 이전 계획 관련하여 SR·평택시 등 관계기관 협의
철도국	<p>26. GTX-B 내륙고속철도 등 철도 공사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를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찰된 1~3공구는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전환('22.11)하여 경쟁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 완료('23.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27.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실태 점검 및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실벌점 부과 완료 - 벌점심의위원회 재심의 후 벌점 확정('22.11.29) *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등 추가 대응 추진
철도국	28. KTX 수원선·인천선 완공 시 평택-오송 구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안아산에서 익산까지의 직선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 경제성 등 타당성이 낮아 미반영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검토할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철도국	29. 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지방균형발전요소가 강하므로 정성적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고려하여 망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p>30. 동해북부선이 여객용으로만 설계되었으나, 동해북부선의 존재 이유는 사실상 남북 평화 프로세스상 북방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전환을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북방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주요 정거장에 대해 화물열차를 위한 유효장(600m* 이상)을 반영하는 등 대책 강구(기본설계, '22.6월 완료) * 철도설계 지침 및 편람 내 화물열차 운영을 위한 유효장 기준
철도국	<p>31. 전환교통사업의 실행은 310억원 정도인 것에 반해,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8조 4,000억원이 지급된 바, 탄소중립 시대에 철도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당국 협의를 통해 '23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보조금 상향(41.8→43.5억원) -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할 제고를 위해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도 지속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p>32. 광역철도사업 중 균형 발전 차원의 5개 선도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23.5)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23.2분기 예타 신청('23.6) - 나머지 2개* 사업은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중 <p>*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나머지 2개 사업은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3.下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철도국	<p>33. 고속철도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형식상으로는 2단계 규격가격동시 분리입찰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 가격 입찰이 되는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SR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차량 입찰공고 <p>* 평가항목 객관화, 세분화(11개→45개) 및 평가 기간 연장(1.5일) 등 기술평가 강화</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4. GTX 사업은 지역발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을 발표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 연장·신설 추진을 위해 ‘GTX 통합 확충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타당성·경제성 등을 검토 중 * '22.6~'23.12 / 교통연구원 등 / 12.6억원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이 확보되는 신설노선은 추후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
철도국	35. 특정업체가 고속철도 차량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리한 입찰 자격 제한을 요구하거나,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교란 행위 엄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에서 특정업체가 요청한 입찰 자격 제한 사항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에 따라 미반영 조치 - 입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운영사에서 부정당업체 등록('22.11.28) 및 손해배상 청구 및 등 불이익 처분 추진 * 공정위에서 '13~'19년까지 11건의 발주에 대해 제작3사의 담합을 인정, 과징금 564억원 부과
철도국	36. 서부광역급행철도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22.11),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기재부, '23.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37. 신안산선역과 관련하여 출입구 숫자를 줄이고, 위치를 옮긴 것이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당초 지침과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고정하거나 최소한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구 추가 설치는 경제성 확보 후 사업비 원인자 부담시 검토 가능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원인자(동작구)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 용역’ 추진으로 용역 결과 검증 후 출입구 추가설치 추진 검토
철도국	38.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포스코 컨소시엄보다 약 4,000억원 낮게 입찰하였음에도 포스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경위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물산이 참여한 NH생명 컨소시엄은 사전자격심사(PQ)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 - 제출서류, 재무능력, 설계능력 미충족
철도국	39.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이 대심도로 공사하겠다고 제안한 경위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국고 절감 방안을 검토했는지 소명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심도 공법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지하 지장물 저축을 피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사가 가능 - 대심도 공법을 적용, 총사업비 6,400억원 절감하여 정부 보조금도 약 3,200억원 감소 * 포스코건설컨소시엄과 협상과정에서 241억원 추가 절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40. 철도관제업무와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이관과 관련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 코레일·철도공단 공동으로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 추진 중('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現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적정성 및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23.下)
철도국	41. KTX와 SRT 통합 운영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SR 철도운영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의 공기업 간 건강한 철도 운영 경쟁체제를 유지할 계획 * 코레일, SR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장기간 논의 결과, 현재의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 미도출
철도국	42.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감안하여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SR 철도운영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 완료 - 평가결과*에 따라 현재의 공기업 간 건강한 철도 운영 경쟁체제를 유지할 계획 * 코레일, SR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장기간 논의 결과, 현재의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합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 미도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p>43. 코레일 철도차량 납기 지연 책임을 제작사에만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귀책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지체일수에서 기 제외 - 그 외 추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 * 철도노조 파업, 코로나19로 인한 시운전시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 코레일은 차량제작사와 상호 합의하에 계획된 일정대로 시운전 지원 - 또한, 차량제작사 추가지원 요청 시 선로사정 및 시운전지원 가능인력 범위 내에서 시운전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제작사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
철도국	<p>44. 코레일의 신규 고속 철도 발주가 납품실적 또는 관련 기술 보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SR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차량 입찰공고 * 평가항목 객관화, 세분화(11개→45개) 및 평가기간 연장(1.5일) 등 기술평가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45. 코레일로지스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주로 되어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로지스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 * 업무특성상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하여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운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진단컨설팅(코레일로지스) 및 코레일 협력을 통해 방안 마련(코레일로지스)
철도국	46. 코레일유통의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계약보증금과 지급보증금, 이중 보증금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 조정, 보증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역사 내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여건 개선을 지원토록 독려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23.5~'23.8)을 통해 적정 임대료 기준 마련, 보증금(계약보증금, 지급보증금) 제도 개선 추진(코레일유통)
철도국	47. 코레일테크의 근무 태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근태 관리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운영 중 ('23.1월, 코레일테크)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태관리 실태 전수조사 후 미흡사항 보완조치 추진(코레일, 코레일테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48. SR의 경우 경전선, 동해선이 없는바, 철도공사-에스알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동해선 운행 방안 관계기관 협의 진행('23.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거쳐 '23.9월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예정
철도국	49. SR 투자자가 철도공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철도공사가 투자자의 SR주식을 인수하고 1개월 내에 상환우선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환우선주는 국제회계 기준상 부채로 간주되어,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SR의 부채비율이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의 공공성 확보와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가 SR에 현물출자 추진('23.7) - SR이 면허조건에 부여된 부채비율 조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50. 수서발 KTX 허용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와 협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운행 방안 코레일, SR 등 관계기관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거쳐 '23.9월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예정
철도국	51. 대전선 존속 여부에 대하여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과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선 폐선 관련 코레일,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등 추진 * 장철민 의원 주재 토론회('23.3.2)에도 참석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 등)하여 현안 논의 - 선로 유지 전제 하에 대전시 등이 다른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
철도국	52. 철도 터널화재 등 재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을 관리감독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의 재난위험에 따른 방재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철도시설 방재설기기준 적합성 검토(터널 화재) 연구용역” 추진중('23~'25, 철기연)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결과에 따라 철도터널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53. SR이 열차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SR이 열차를 직접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은 신규차량(EMU-320) 14편성을 직접 구입하는 방안으로 추진
철도국	54. SR의 경우 운영 중인 열차 32편성 중에 22편성을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SR과 철도공사 양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서비스 개선계획, 철도안전 강화 대책 등 철도 공기업 간 건강한 철도 경쟁 기반 마련·추진 * 거버넌스 분과위 결과발표('22.12, 통합결정 유보), 철도서비스 혁신 등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23.1),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23.1) 등
철도국	55. 공공기관 혁신안의 자산 매각 중 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면밀한 업무 분석, 합리적인 진단과 평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 발표('22.7)한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 준비(코레일·SH) * 용·북합국제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 등 용산 역세권 부지 개발목표와 주택계획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코레일·SH)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56. 특수목적법인이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목적 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운영중인 민자철도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 재취업 임직원 현황 상시 조사 시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철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사
철도국	57.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출에 위법한 측면이 있는바 관리·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처 로서 조치를 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민감한 정보를 감사원 등에 제출 시, 위법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토록 운영기관별 내부 지침 마련(코레일 '23.6월, SR '22.11월)
철도국	58.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 관련하여 차량 공급이 독점으로 이루어 짐에 따른 문제와 이용객 예상 오류에 대하여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부상철도는 국가 R&D사업으로서, 국내 자기부상열차제작 기술을 보유한 현대로템이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R&D 사업을 추진 ○ 자기부상철도 운영개선방안에 따른 궤도시설 전환 행정절차* 추진('22.7~) <p>*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도시철도→궤도, '23.8.) 및 궤도승인 신청 등 절차 준비</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부상철도 운영개선방안에 따른 궤도시설 전환 행정절차 추진 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59.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이 70%가 투입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막대한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요가 부족하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부상철도 운영개선방안에 따른 궤도시설 전환 행정절차* 추진('22.7~) *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도시철도→궤도, '23.8.) 및 궤도승인 신청 등 절차 준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부상철도 운영개선방안에 따른 궤도시설 전환 행정절차 추진 계속
철도국	60. 경인선 지하화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제2경인선 건설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연계없이 추진 가능한 제2경인선 사업계획 재기획 추진('22.2~'23.2)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재기획안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타 신청 등 후속 조치 추진
철도국	61.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문제 체증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울 8호선 분당~오포 간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을 경기도에 제출한바 경기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 추진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서 분당~오포 간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면 망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62. 피기백시스템 철도 화물운송 도입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트럭 수송용 피기백 화차 핵심 기술연구(철도기술연구원) 완료('19) 및 상용화를 위한 기획연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행 <p>* 스마트 철도물류 4.0 혁신기술 개발('21~'23)</p>
철도국	6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정 시 KTX 호남선 직선화(천안아산-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등 비수도권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사업을 검토할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철도국	64. 호남권 교통의 중심지인 KTX 익산역 리모델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및 재정을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역은 준공 후 8년 경과한 역사로 현 시점에서는 리모델링 계획 없음 ○ 익산역의 안정성, 고객편의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필요성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65.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SOC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예타 면제 검토 및 조기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타면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 범정부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중검토 필요 ○ 사업추진 여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검토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철도국	66. 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시 호남선, 경전선, 광주선 등 기존 철도 노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 반영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기존 노선 선로용량을 고려한 광역철도 사업을 검토할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p>67. 고양시 노후화된 지축역 개선, 주민 이용편의를 고려한 덕은역 위치 확정, 신분당선 고양 연장 등 고양시 교통인프라를 개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지축역 개선</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축역 시설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23.3월)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차적으로 설계용역 준공 이후 공사 추진 예정 <p><input type="checkbox"/> 덕은역 위치</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흥대선 역사 위치(안)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3.2.13)하였으며, 협상 절차 진행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위치 등을 포함한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3.12) <p><input type="checkbox"/> 신분당선 고양 연장</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사업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경과에 따라 상위계획 반영 등 사업추진 필요 * KDI 예비타당성 조사종으로 중간점검('23.7)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대안 검토 필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68. 포항-삼척 구 삼척역사 보상과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종전 목적대로 부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철도공사 책임자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사업과 관련 코레일 소유 부지 사용방식에 대해 철도공단과 코레일 간 토지수용 및 보상방안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단과 코레일 간 이견으로 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도국	69. 국내 고속철도차량 시장 보호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GPA(정부조달협정), 계약법령 등에 따라 해외 고속철도차량 제작사의 국내 입찰 참여를 제한은 곤란 - 다만, 핵심기술 R&D 및 국제인증 취득(해외발주처 등 요구) 등 국가지원 추진 * (R&D) 하이퍼튜브 에타(~'23.하)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대상기업 선정('23.3)
철도국	70. 고속철도차량 발주를 국가철도공단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차량은 운영기관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으며, 철도차량 입찰방식은 관계기관 등과 지속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SR, 철도공단 등과 고속차량 입찰방식 논의(계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71.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할 제고를 위해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
철도국	72. 경남지역에 수서발 고속열차를 투입하고, 수요에 맞게 운행횟수 등 전체 공급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운행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진행('23.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거쳐 '23.9월 수서발 고속열차 확대 운행 예정
철도국	73. 역세권법 활용 및 지방 역세권 개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국비를 지원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철도 시설과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용자가 가능하며, - 일부 공공시설은 시설별 설치의무자가 비용을 부담·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 사업별로 재무적 타당성 등 사업성 분석 및 이해 관계기관·사업시행 주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원조달 등 사업추진 방안 마련 필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74. GTX-B 갈매역 정차 및 KTX 임실역 정차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갈매역 정차 < 조치실적 : 추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공고 시 추가역을 제안 가능토록 했으나, 협상대상자(대우건설 컨소시엄)는 갈매역 등 추가역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협상대상자 간 사업비 분담 등을 협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추가 제안하면 협상 과정에서 검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실시협약 체결 및 '24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추진 <input type="checkbox"/> 임실역 정차 < 조치실적 : 완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역 이용수요(열차당 8명), KTX-1 정차를 위한 승강장 길이 부족(38m), 운행시간 증가(3~4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임실역 고속열차 이용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 시 정차 재검토
철도국	75. 고양시 내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하여 식사선 트램 등 교통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서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트램계획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면 망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76.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양주 운행 열차 증량 편성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 증편을 위해서는 차량 2편성 추가 소요되나, 해당 구간 이용수요가 감소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철도국	77. 국민의 철도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 안전 관리의 부족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부, 코레일·철도공단 공동으로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 추진 중('23.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現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적정성 및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추진('23.下)
철도국	78.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교육을 철저히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철도 정차역에 대한 '스마트 철도역사' 구축사업 기본설계 수립('20.8~'22.12) -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역사 시설 관리 효율화 및 이용객 편의성 제고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철도역사 시범구축 사업 추진('23.5~'24.12, 수서·오송·익산·부산역) - 디지털트윈 통합관리시스템, 역사 내 안내서비스, 지능형 CCTV 등 구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79.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군산~목포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김천 등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21.12~)를 통해 사업타당성 확보방안을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예타 신청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 군산~목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건의 시 검토할 계획
철도국	80. 철도차량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전 컨설팅, 철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SR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차량 입찰공고 <p>* 평가항목 객관화, 세분화(11개→45개) 및 평가기간 연장(1.5일) 등 기술평가 강화</p>
철도국	81. 남부내륙철도 수의 계약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찰된 1·9공구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T/K→기타, '22.9월) 거쳐 기타공사로 전환하여 설계용역 착수('22.11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82. 철도사업 경제성 (B/C)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지방균형발전 고려한 정성적 평가가점 강화 등 제도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부문 경제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편익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추진
철도국	83.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차를 투입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미흡 (B/C 0.43)하고 지자체간 비용부담 미합의 등으로 사업추진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 투입을 위한 사업비 미반영 ('23예산 미반영, '22.12) <p>* 전동차 투입 추진은 곤란하나, 지역주민의 열차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열차운행 확대 등 적극검토</p>
철도국	84. GTX-B·C의 조속한 개통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B는 재정 구간 설계 및 민자 구간 협상 진행 중('23.1~) ○ GTX-C는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 체결 계획('23.8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B '24년 상반기 착공, GTX-C '23년 연내 착공 목표로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85. GTX-B노선 재정구간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찰된 1~3공구는 설계·시공 분리('22.11) 하였고 경쟁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 완료('23.1)
철도국	86. 대심도 장대터널의 재난대응 복합훈련장 개발 과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은 집중적 예산 지원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23~'27)을 통해 대심도 재난 리스크 진단모델 및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실증단계를 거쳐 교육프로그램 및 대응 매뉴얼 등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예산확보 및 수행기관 협약 체결('23.4.1) * (과제명) 대심도 장대터널의 재난대응 복합 훈련장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용) GTX 등 대심도 철도시설에서 고위험 재난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기 간) '23.4~'27.12, (예 산) 350억원 ○ 연구개발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상황 등 지속 관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87. 중랑역, 정발산역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랑역, 정발산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 최근 급증하는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23.1) - ①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체계를 조기에 정착, ②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 ③첨단 유지보수체계 구축, ④국가 철도 안전 기능의 정상화 4개 세부과제 마련
철도국	88.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정(안)을 재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정(안) 재검토 - 과적편적의 우려가 높은 살화물(시멘트·석탄·광물)을 싣는 무개화차(지붕이 없는 화차)는 축중 검사를 의무화 * 컨테이너 등 계량증명서 등으로 중량확인인 가능한 경우에는 과적편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축중검사를 시행토록 규정
철도국	89. 가덕도신공항이 거점 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유치에 위해 남부내륙 철도와 연결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검토할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90. 철도공사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철도공사 자체감사 실시('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제동장치가 반영된 표준제작설명서 제시 공문은 단순 권고로 판명 * 차량 제작 시 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공문은 철도운영자의 “권고” 의견으로 수정 하여 공문 회신('22.5)한 것으로 확인 - 한국시멘트협회는 철도공사의 설계승인 없이 시멘트 화차 100량 제작 중 ○ 철도운행안전 및 기존 차량과의 호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시멘트화차 표준 제작설명서 제정 (’23.6월)
철도국	91. 중부내륙선 판교직결 운행에 따른 추가 편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교 직결운행을 위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 개량공사 중 (’23.6월 ~ ’23.11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선 판교 직결운행 열차운행 계획 수립과정에서 추가 편성 등 검토 (’23.12월 판교 연장 개통 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92. 총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방안을 검토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22.2~'23.7) 완료 후 총사업비 협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완료하고, T/K 발주 등 후속 절차 조기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
철도국	93. 살미역에 보행육교를 설치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미역 보도육교 반영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23.2) ○ 보도육교 관리 주체(충주시,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협의 완료('23.5)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중('23.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설계를 거쳐 보도육교 설치 할 예정('24.12)
철도국	94. 오송연결선 건설과 관련하여 평택~오송 2복선 완공 이전에 분기기를 사전 설치 하고, 향후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검토할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95. 충청권(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 노선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23.2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3.6)
철도국	96. 코레일네트웍스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 감사실 점검('22.12월) 및 코레일네트웍스 자체 감사실 조사('23.1월)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코레일네트웍스)
철도국	97.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의 심야 교통 편의를 위해 공항철도의 심야 운영을 도입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철도 고속화('23~'28), 신호 대교체('23~'30) 등 공항철도 인프라 개선 추진 중으로 심야열차 운행 시 사업 추진 곤란 - 또한, 유지보수 작업시간 확보가 어렵고 심야열차 운행 중 이례사항 발생 시 대처 불가로 현시점에서 추진 곤란 * 타 교통수단(기차, 수도권 도시철도 등)의 막차 시간(12~01시)과 연계하여 공항철도 막차도 편성 운영함이 타당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화 및 신호시스템 교체 완료 후 항공수요와 여건변화 등 상황에 따라 검토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98. 항공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철도 승무원에게도 적용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를 포함한 KTX폭행사건 관련 안전강화대책 마련('22.10월) ○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및 폭행을 추가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2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폭행 시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퇴거(하차) 시킬 수 있도록 하고, -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지속되는 경우 격리
철도국	99. 전북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 필요 및 철도 소외지역의 인프라 증대를 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부문 경제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편익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철도국	100. 익산~천안아산 직선화, 국가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 철도 사업들을 제4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건의하는 경우 검토할 계획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23.4) 및 '23.7월 착수 예정
철도국	101. 서울 지하철 1호선 차량 속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이상 경과 노후차량 교체계획은 운영기관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부에서는 적기교체를 위한 노후 도시철도 차량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하고 있음 <p>* '21년~'25년 신규 발주차량 1,646칸에 대해 25~30% 지원</p>

□ 감사관실 · 운영지원과 (6건)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사관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들의 출장과 관련한 기강해이 실태에 대해서 지적한바 감사관실 주도하에 TF를 구성하여 주택도시 보증공사 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허위출장이 발견되면 환수하고, 횡령죄이므로 고발 및 징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감사 실시('22.11월 ~ '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여비(107백만원)를 전액 환수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징계 등(총 35명) 조치 * 인사자료 활용(임원 2명), 징계(4명) 및 문책(경고 11명, 주의 18명) 조치
감사관실	2. 국토교통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라' 등급을 받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에는 3개 평가항목(총 4개) 등급이 상승하고, 중앙부처 평균점수와 격차도 축소 - 대국민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의 신속도·충실도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 민원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민원 맞춤형 행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돌봄 서비스 시작"('22년 민원개선사례 행안부장관상) - 또한, 민원콜센터(매년 20만건) 상담 역량 강화, 민원담당자 심리 치유 지원 등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국토교통부 민원행정 개선계획 수립·추진('23.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국토교통부 민원행정 개선계획('23.4)」에 따라 국민신문고 관리 강화, 민원 관리체계 개선 등 적극 추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사관실	3. LX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에 대하여 실시 감사 실시('22.10.31.~11.04.) - 해당 성추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간과한 것이 확인되어 향후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엄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 요구
감사관실	4. LX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인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지사장의 징계 경과에 대해서 실태조사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X에서 성추행 가해자(지사장)를 고발* 조치('22.11.22.) 및 LX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조사 실시('22.11.3.~12.31.) * 피해자 7명 전원이 수사 및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청주 흥덕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건 종결('22.12.31.) - 성인지 감수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3년 4대 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 시스템 등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사관실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산하기관들도 하위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척결,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부동산 투기로 실추된 국토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토부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권익위 ‘청렴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청렴도 향상대책을 마련('22.5)하여 추진하였으나, '22년 청렴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옴(4등급)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국토부 대표 취약분야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분야 업무 수행 산하기관의 경우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등 지속 실시 ○ 장관 주재 신입직원 토론회, 소속·산하기관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을 대내외에 홍보·전파
감사관실	6.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들은 토지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어서 투기 의혹에 각별히 신경 쓸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의 공직복무관리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

□ 공공주택추진단 (14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주택 추진단	1. 3기 신도시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하여 면적 확장을 통한 넓은 평수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 상향* 완료 * 평균공급면적 15평 → 17평 상향
공공주택 추진단	2.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가로 주택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지방의 도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수도권 편중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 * 관리지역 지정현황 : 수도권 11곳, 지방 1곳 - 소규모정비사업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23.4)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주택정비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준공('23.11)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 추진
공공주택 추진단	3. HUG가 담당하는 가로 주택정비사업 용자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기금 예산은 '22년 2,675억 대비 68% 증액한 4,496억 확보 ○ 이차보전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시행 중('23.4월) * 조합이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할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2%)를 기금으로 보전하는 것('23년 예산 40억 반영, 2,000억 민간재원 활용 효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주택 추진단	4.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사송신도시에 양방향 IC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울산권 광역교통개선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실시(대광위, '23.2월,5월) - 양산시에서 사송 하이패스 IC 타당성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검토 완료후 양산시 및 LH 간 사업비 분담 협의('23.10~) ○ 분담비율 확정 후 고속도로 연결 협의 등 사업절차 추진예정('23.12~)
공공주택 추진단	5. 3기 신도시 사업지 내 토지주들의 반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주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지구별로 민관공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차질없이 진행 중 * (보상율) 교산 100%, 계양 100%, 대장 89%, 왕숙 84%, 창릉 56%(226월 보상 착수) - 토지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 제도개선 이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2.12.29) :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GB 이외 지구까지 확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공공주택 추진단</p>	<p>6. 3기 신도시 핵심인 교통망 확보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초기부터 주민 불편이 없도록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신청 전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 확정(1년 단축)하였으며,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도로설계 등 교통망 확보를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 * (남양주왕숙) 강동~하남간 도시철도 건설, (하남교산)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건설, (부천대장·인천계양) S-BRT 신설, (고양창릉) 고양~은평간 철도 건설 등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 편의를 위해 先교통 後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p>공공주택 추진단</p>	<p>7.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무네미골 지역을 전면 재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과천지구 내 무네미골은 주민 협의를 통해 '21.9월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2.1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 지속적인 주민협의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근린생활시설용지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주택 추진단	8.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실태조사 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 추진절차 등을 일원화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빈집 문제 해결방안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의무화, 빈집 수용권 부여, 이행강제금 신설, 공익신고제 등 운영중 ○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은 정비를 위해 수용이 가능한 오피스텔 부분외 상가 (91호) 소유자 전원의 매각 동의가 필요 *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빈집소유자들은 토지 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며, 상가소유자들은 시행자와 개별협의를 통해 보상이 진행됨 - 현대오피스텔 검토 결과 사업성, 동의율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주택 추진단	9.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에 대하여 민간에 비해 우호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민간 사업 간 사업비 융자한도* 차등 관련 기준 변경 완료 * (당초) 공공: 총사업비의 최대 90%, 민간: 70% (변경) 공공: 총사업비의 최대 70%, 민간: 70%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주택 추진단	10.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초기사업비 비중을 3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결과, 초기사업비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현행 초기사업비* 한도(총사업비5%, 15억 이내)로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p>* 초기사업비(조합인가~사업인가):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 본사업비(사업인가~준공): 공사비, 이주비, 보상비 등</p>
공공주택 추진단	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하여 지구지정 고시가 끝난 8곳의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지정 고시가 끝난 10곳 중 7곳은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곳도 설계공모 추진 예정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 시공사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후에도 노후 주거지 밀집, 낙후 지역은 공공주도로 적극추진 할 계획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공공주택 추진단	12. 일원화된 빈집 통계를 확보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준공*에 따라 ① 빈집 등급 ② 빈집 실태조사 평가항목 ③ 실태조사 기간 등의 내용을 일원화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하고 전 국토에 대해 일관된 빈집 통계의 틀 마련('23.6) <p>*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 국토연구원 / '22.7월-'23.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 제공 예정('23.下~)
공공주택 추진단	13.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으로 반포1동 등에 투기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포 1동 모아타운 지정을 중지하도록 국토교통 부가 나설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수립권은 시·군·구에 있으며,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임 <p>* 최근 서울시에서 주민간 찬반 갈등, 투기우려 등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을 제외하였음 ('22.10)을 확인</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공공주택 추진단</p>	<p>14.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 사업지에 대한 투기 등 부당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개 개발정보 여부 확인을 위해 발표 전 국토부·사업시행자 쏘 직원· 업무관계자 직계존비속 전수조사* 실시 * 김포한강2('22.11) / 평택지제·진주문산('23.6) -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지역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 사전 차단 (발표시점부터 2년, 필요시 연장) - 사업발표 이후 국토부·지자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보상투기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 중 * 김포한강2('22.12~) / 평택지제·진주문산('23.7~)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신규택지 발표 시에도 보안유지 철저 및 업무관계자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없도록 하고,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 반을 운영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하겠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8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1. 혁신도시 지방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대상인원을 감소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지역인재 채용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안 검토 중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공공기관·대학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2. 혁신도시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극적 정책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우수 기관에 포상 완료("22.12.28.) <p>* 한국부동산원, 한국특허정보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3.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담당기관으로서 혁신도시 성과관리에 대한 종합지표 개발, 포상,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상 사업의 이행실적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 -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의 종합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강구하겠음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4.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정리하여 10개 혁신도시 내용을 마무리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준비 중이나, 지역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갈등 최소화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5.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어젠다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 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준비 중이나, 지역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갈등 최소화방안 마련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초광역권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준비 중이나, 지역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갈등 최소화방안 마련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7. 지역내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 방안을 마련 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준비 중이나, 지역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갈등 최소화방안 마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8. 혁신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2차 이전 시 인근 중소도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건설과 연계한 방안 마련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준비 중이나, 지역간 강한 의견대립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 최소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안, 갈등 최소화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정에서 인근지역 상생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6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1. 인천-서울 간 M버스 증차에 대해 검토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두시 전세버스 투입을 통한 증차 지원사업 추진 완료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2. 노포-정관선 도시철도 조기 구축을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선(노포~월평, 광역철도^{철도국}) ('23.5.) - 정관선(월평~좌천역, 도시철도^{대광위}) ('23.7)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 수도권 순환철도망(별가람-의정부 구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 <p>*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p>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경기도)에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건의 시 차기(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검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4. 기관 간 이해충돌로 인해 2기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대책 집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광위 내 갈등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 *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22.8.18, 이헌승 의원) 및 국토교통위 통과('23.3.23)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법」 개정 완료('23) ○ 광역교통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관 간 갈등사항 적극 중재·조정 추진 (계속)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5. 2기 신도시인 고덕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과 관련하여 지침 제26조의 해석에 대해 LH와 협의 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회의 개최 ('22.11.17, 홍기원 의원 주관) ※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 예정으로 개선대책 변경과 관련한 지침 제26조 해석 문제는 없음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6.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시정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거리 기준 관련 법률 자문(1차 '23.12, 2차 '23.1) 결과를 토대로 법제처 법령해석 협의를 진행('23.2)* * 기존 법령해석(19-0536)과 동일한 해석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거리 기준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법 시행규칙 관련 사전규제 심사 등 절차 진행 중('23.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7. 5호선과 관련하여 철도망계획에는 지자체 간 합의 시에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추진한다고 되어있으나, 지자체 간 협의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간 갈등 사항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기지·건폐장 문제는 서울-김포 간 협약체결('22.11), 김포-인천서구 간 협약체결('23.5) - 세부 노선계획 문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23.2~)으로, 별도 '노선 결정 협의체' 운영 착수('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을 통한 노선계획 결정 예정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8.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간 갈등 사항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기지·건폐장 문제는 서울-김포 간 협약체결('22.11), 김포-인천서구 간 협약체결('23.5) - 세부 노선계획 문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23.2~)으로, 별도 '노선 결정 협의체' 운영 착수('23.5)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을 통한 노선계획 결정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9. BRT 기능 제고를 위해 우선신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를 통해 S-BRT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실증 추진 완료(~'22.12) * (S-BRT 핵심기술) <u>우선신호</u>, 양문형 전기굴절 버스, 폐쇄형 정류장, 비접촉 결제(태그리스) 등 - R&D 성과물 중 하나인 우선 신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자체에 ‘우선 신호체계 가이드라인’ 배포 계획('23.6)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T 운영(계획) 중인 지자체에 우선 신호체계 가이드라인 배포('23.6)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0. BRT가 국가계획에 따라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BRT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T 평가체계 정립 등을 위한 ‘BRT 시설 기술기준’ 개정안을 고시('22.8)하고, -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BRT 시설을 평가·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 ('22.12) * (평가기간) '22.10~11. (평가대상) 총 32개소 (운영중 27, 공사중 4, 설계중 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1.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을 포함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상 수립용역 준공('22.12.) * (익산시)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공모('22.9월 ~ '23.2월),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서 접수('22.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신청('23.5월)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을 요청하면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음 * (익산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및 건립 추진('24. ~ '25.)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2. 판교-모란을 잇는 전철이 없어 불편이 있고, 향후 교통수요 증가도 예상되므로 판교-모란을 잇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경기도, 성남시)가 경제성 확보 미흡 등으로 예타 대상사업 철회 요청('23.7)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3.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공사 재개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간 직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20년 5회, '21년 7회, '22년 5회, '23년 1회 등 ○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업추진 지연 * (서울시) 공사비 일부 및 운영비 일부 분담 필요 (인천시) 사업비 일부분담 수용, 운영비 분담 불가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안 제시 등 적극 중재 노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4.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운송원가를 적정수준까지 상향하여 준공영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기관에서 매년 시장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준공영제 신규 노선 공고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 기존 노선의 경우 기존 인건비에 전년도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5.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 역 확정 등 고양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것</p>	<p>< 조치실적 : 추진 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시행청)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22.5~’23.하) 중으로, 용역 과정에서 역사 위치 등을 종합 검토 * (절차)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 기본 및 실시 설계(사업계획 수립) → 공사 → 개통·운영 <p>< 향후 추진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안)이 제출되면 기본계획 승인 등 후속조치 이행
<p>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p>	<p>16. 고양에서 서울 간 출퇴근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증차할 것</p>	<p>< 조치실적 : 완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 운행횟수를 7개 노선에 대해 46회 확대 완료(’23.5) ○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 신설 결정(’23.6)